

따뜻한
연대
살맛나는
세계



참여연대 제17차 정기총회

2011. 3. 5.

따뜻한
연대
살맛나는
세계

2011. 3. 5. 참여연대 제17차 정기총회

민생복지와 평화, 시민의 자유를 위한 5대 시민행동

2011년 총회를 맞아 우리는 지난 16년간 우리사회에서 참여연대가 담당해 온 사명과 역할에 대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1994년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이 충만한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권력의 부패와 횡포를 시민의 힘으로 감시하고 고발함으로써 국민의 공복에 불과한 사람들이 주인 위에 군림하는 시대착오적인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습니다. 시민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를 제도와 문화로 정착시키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인 복지가 권리로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화하는 활동에 전념해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정의롭고 공정하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각계각층과 가까이 연대해왔으며 국경과 인종, 이념과 종교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기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참여연대 앞에 놓여진 시대적 과제와 사회적 요청들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마주합니다. 지난해 총회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독단과 독주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시민의 힘으로 민주 복지 평화를 향한 변화의 물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간에서 그리고 각 정책영역에서 참여연대와 시민운동이 이루어 낸 사회적 성과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 사회는 안으로는 민생과 민주주의, 밖으로는 남북관계와 대외관계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시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악화되었고 사회적 안전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정사회를 외치지만 부와 특권의 편중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가계부채, 전세대란, 물가폭등, 사교육비에 힘겨워하고 있으며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중차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대다수가 우려하는 4대강 사업 강행, 구제역 늑장 졸속 대응으로 대규모 환경재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남북관계는 실속 없는 힘의 대결로 치달아 시민들은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팎의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민들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참여는 차단당하고 있으며, 주권자인 시민들은 국정운영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력기관들은 주인의 머리 위에 군림하던 익숙한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향후 2-3년 동안 우리는 총선과 대선 같은 정치적 선택 외에도, 서민경제와 복지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할 사회적 토론과 결정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 정부가 추구해온 실패한 특권층 우선 정책, 잘못된 반민주적 철학, 낡은 냉전적 이념으로는 절대로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사회가 새로운 가치기준, 새로운 연대정신, 새로운 정책대안을 공유하고 실천해낼 수 없다면 비판의 목소리 역시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회원들은 2011년 총회를 맞아 2011-2012년

우리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시대적 도전에 맞서 시민의 힘으로 민생복지, 민주주의, 평화를 향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실천해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첫째, 우리는 살인적인 물가고와 전세대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와 양육교육비, 고용대란으로 신음하는 서민들,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의 그늘에서 피해해져 가는 대다수 중소기업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여 「민생살리기」 캠페인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보편적 복지의 확립이 헌법정신의 올바른 구현이자, 각종 사회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발전의 기본방향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구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각계각층 시민행동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부추기는 비현실적이고 냉전적인 대북정책을 변화시켜,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교류협력에 바탕을 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는 「한반도 평화만들기」 운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선거를 비롯한 모든 국정운영에서 시민을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현 정부에서 반복되는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사회적 비판에 대한 통제와 억압의 실태를 낱알이 기록하고 고발하는 「현 정부 권력운용 종합평가 작업」에 착수할 것이며,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 견제와 균형, 민주적 기본권 강화에 바탕을 둔 '국가권력에 대한 참여민주주의 통제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욱 단단하고 내실있는 참여연대를 만들기 위한 3가지 약속

참여연대의 회원과 임원, 활동가들은 "선한 동기와 공익적 목적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
는 창립회원들의 정신에 따라, 참여연대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 해왔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와 소액다수 후원을
기반으로 그 어떤 세력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해 온
참여연대의 전통을 지키고 더욱 강화해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의 시련 속에서, 참여연대를 지키는 힘이 오로지
단합된 회원의 힘과 한결같은 참여,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확인했습니다.

2011년 총회를 맞아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내실 있는 참여연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회원 모두가 더욱 큰 애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연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과 참여의 방식을 개선하고,
참여연대 회원 공동체를 보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3년
이내에 15000명 이상의 회원이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로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시민들에게 보다 명료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다듬을 것이며, 참여연대가 생산한 정책데이터와
각종 유무형의 자료들을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과 회원들의
선한 의지를 폄훼하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가 있다면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셋째, 참여연대의 재정과 활동력을 보다 지속가능한 토대 위에
올려놓기 위해 중장기적인 조직발전계획과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의사결정과 재정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더욱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참여연대를 만들 것입니다.

● 총회결의문	005
---------	-----

이렇게 일했습니다 2010 사업보고 015

● 10대 중점 과제	016
● 활동기구	028
의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공익법센터 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민생희망본부 시민경제위원회 조세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 부설기관	040
아카데미 느티나무 / 참여사회연구소	
● 사무처	042
시민참여팀 / 커뮤니케이션팀 / 운영팀 *시민감시팀 / 사회경제팀 / 평화국제팀은 활동기구 사업보고 참조	
● 연대활동	046
● 숫자로 보는 참여연대	052
회원현황 / 감시와 정책제안 / 도서와 영상물	
● 참여와 소통	062
회원행사 / 인턴 / 시민교육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2011 사업계획안 077

● 한 눈에 보는 사업계획	078
● 5대 중점 / 3대 발전 과제	084
1.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	
2. 복지국가 만들기 캠페인	
3. 한반도 평화 만들기 캠페인	
4. 표현의 자유 캠페인	
5. 정부권력운용 종합 평가와 한국사회 개혁대안 제시	
6. 회원 15,000명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7. 참여연대 운동 알기 쉽게 만들기	
8. 지속가능한 참여연대 만들기	

● 활동기구	108
의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공익법센터 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민생희망본부 시민경제위원회 조세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 부설기관	130
아카데미 느티나무 / 참여사회연구소	

● 사무처	134
시민참여팀 / 정책기획팀 / 운영팀 *시민감시팀 / 사회경제팀 / 평화국제팀은 활동기구 사업보고 참조	

● 연대활동	140
--------	-----

살림살이 2010 결산 및 2011 예산안 141

● 회계감사보고 / 2010 결산보고
● 2011 예산안

정관개정안 155

함께 일하는 사람들 2011 임원인선안 167

● 부록 회원 설문조사 결과 / 노래 / 기구표	173
----------------------------	-----



2011. 2. 16 참여연대 간사들 | ©사진 정김신호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0 사업보고

10대 중점 과제

활동기구

부설기관

연대활동

사무처

숫자로 보는 참여연대

참여와 소통

이렇게
일했습니다

일자리, 복지, 주거 영역 등 민생 과제와 대안

1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운동

● 목표와 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조항 삭제', '최저생계비와 재산기준 현실화'
- 최저생계비 8% 이상 인상

● 약평

-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엽서보내기 등을 통해 4,000여명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빈곤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확산시켰음.
- 희망UP캠페인은 장수마을 체험단 11명 외에도 온라인 체험단 13명, 국회의원 11명을 포함한 릴레이 체험단 20명, 자원활동가 18명, 자문위원 10명이 참여하였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엽서보내기 거리캠페인에 1,500여명, 네이버 카페회원 1,476명, 해피빈 모금에 953명이 참여하여 연인원 4,000여명이 함께한 대규모 시민참여형 캠페인으로 진행되었음.
- 최저생계비 5.6% 인상으로 8% 목표 달성은 하지 못했지만, 언론의 집중보도 신문 100여 회, 라디오 20여 회, 기타 케이블,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빈곤문제 공론화, 최저생계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했음.
- 정치인들이 빈곤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만든 것은 성과임.

● 주요활동

-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 서울 삼선동과 동자동 쪽방지역에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온·오프라인 체험 캠페인 진행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릴레이편지 로비, 사진전, 1인 시위, 백서발간 등 최저생계비 인상 촉구 캠페인 진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운동
- 국회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초법 개정 청원안 제출, 입법로비

일자리, 복지, 주거 영역 등 민생 과제와 대안

10-2 전국민 고용안전망 실현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운동

● 목표와 방향

-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개선,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제도화
- 영세사업장 사용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감면

● 약평

-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면서 각계각층을 설득하여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를 구성했음. 여러 입장과 요구를 조율하여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고용보험법 개정 단일법안'을 마련한 것은 성과임.
- 정기국회에 맞춰 대중 캠페인과 '저임금 노동자 4대 사회보험료 감면'을 위한 입법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인한 국회파행으로 중단되었음.
- 2011년 참여연대 복지국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재추진할 계획임.

● 주요활동

-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결성
- 연대회의 차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마련
-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공동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후 입법로비 진행
- 청년실업 해결 및 고용안전망 확충 촉구대회 진행

10-3 서민주거불안정 해소 및 재개발·뉴타운 행정의 개혁운동

● 목표와 방향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재개발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지방선거에서 뉴타운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 공약 감시, 견제
- 전세대란 예방, 서민 주거 안정 위한 법, 제도 개선

● 약평

- 상반기,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결성 등 지방선거에서 재개발 개혁 공약 채택 운동을 진행하려 했으나 전망과 달리 선거에서 재개발은 주요 이슈가 되지 않았음.
- 이에 활동 방향을 '지방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공론화로 수정하고, 주거분야 오세훈 시장 시정평가를 진행했음.
- 하반기,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해법모색 토론회, 입법로비 활동에 집중했고, '중소형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상승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확산시켰음.

● 주요활동

- 뉴타운·재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단체들과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결성
- 공약채택운동 진행, 주거분야 오세훈 시장 평가 진행. 토론회, 평가보고서 발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개정 청원안 제출. 그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최우선변제 범위 금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 통과되었음.
-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발표, 최초로 부동산 시민강좌 개설

10-4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운동

● 목표와 방향

- 일자리 담론 및 대안정책 개발
- 정부 일자리 대책 모니터링 및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개입

● 약평

-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중점과제로 선정해 정부와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시리즈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함. 청년실업네트워크와 청년 일자리 캠페인을 벌여 청년 실업 이슈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5% 청년채용 의무)'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공동 발의한 것은 성과
- 다만, 노동사회위원회 내부의 내용적인 준비 미흡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함. 향후 일자리 확대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책적 입장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위원회, 민생희망본부, 시민경제위원회 등 유관부서와 공동 연구 진행할 계획

● 주요활동

- 서울시정 평가 리포트, 정부의 일자리 대책 모니터보고서 ①, ② 발표
- 지방선거 전후로 청년실업네트워크 주최, 요구안 발표, 5.1 청년주권선언대회, 전국도보순례(8/4~8/14), 서명운동 진행
- 참여연대 6기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청년층 고용한파, 우린 아직 떨고 있다!' 기획 기자회견, '강요된 스펙, 시원하게 날려버리세요' 물풍선 던지기 퍼포먼스 진행

10-5 권력기관의 전횡과 불법탈법 집중 감시활동

● 목표와 방향

- 권력기관의 불법탈법에 대한 감시와 법률적 대응
-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및 임기 절반 일방적 독주와 불법에 대한 역사적 기록
-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에 대한 집중 비판 및 검찰감시 보고서 등 발표
- 국회 사법개혁논의에서 검찰개혁이 첫 번째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기여
- 국정원과 경찰의 권한남용 감시 및 관련 보고서 발표
- 국정원 권한강화 관련 법률안 입법저지

● 약평

- 검찰 관련 보고서들과 고위공직자 평가 보고서, 이명박 정부 2년 보고서 등을 발표하여 감시단체로서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했고, 권한남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여 책임추궁 활동도 하였음.
- 그러나 민간 불법사찰사건, 경찰의 선거개입 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 등 현안에 대해서는 이슈를 따라가는 수준에 그쳤으며, 사안에 대한 깊이있는 평가와 의제화 등 능동적 기획이 부실했음.
-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고위공직자 인사 평가, 검찰 연례 보고서 등은 내용의 충실도를 높이고, 사회적 이슈가 되도록 기획을 보강해야 함.
- 국정원 권한 강화 법률 저지활동은 국회 논의가 보류되면서 사업도 유보되었음.

● 주요활동

- 국정원 직원의 시민단체 행사 방해에 대해 국정원장 고발, 스폰서 검사 46인 고발 및 국민감사청구, 경찰의 교육감 선거개입 사건 관련 경찰청장과 관련자 고발,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지원관 및 뇌물수수 혐의 조홍희 서울국세청장 고발 추진

-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보고서, 고위공직자 인사 평가 보고서,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 발표
- 스폰서 검사 국민감사청구 위한 서명운동(3,000명) 진행, 특검활동 모니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입법청원 및 검찰개혁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로비,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 기소권 남용(전기통신기본법) 보고서 발표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 관련 수사 모니터, 특검 임명 촉구 활동 진행, 민간사찰 사건 피해자 김종익씨에 대한 의인상 시상 진행

10-6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지키기 운동

● 목표와 방향

- 현안에 대한 활발한 공익소송제기 및 선(善)판례 축적

● 약평

-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다양한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음.
- 이른바 '손담비UCC 소송' 승소, '미네르바 사건' 헌법소원 (전기통신기본법) 승소, DAUM 상대 수사기관 정보유출 미공개 손해소송 부분 승소 등의 성과가 있었고,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국가와 다른 견해에 대한 차별', '학생이 다양한 관점을 접할 권리(교과부의 역사교과서 수정 지시 등)', '국가의 중립성 의무' 등의 제기하면서 표현의 자유 영역을 확장했음.

● 주요활동

-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무영장 신상정보 제공 포털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전기통신사업법 54조3항 헌법소원, 이메일 압수수색 미통지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소비자 운동에 강요죄 공갈죄 적용 위헌소송 등 공익소송 제기
-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맞춰 연대활동으로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보고대회 개최
- 한나라당의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 개악시도 저지 연대활동, 인터넷에 천안함 침몰 관련 글 게시로 국가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해자 법률지원 중임.

10-7 국가재정에 대한 감시, 개입, 대안 만들기 운동

● 목표와 방향

- 국가재정에 대한 감시, 개입, 대안 만들기 운동의 준비

● 약평

- 2010년을 국가재정 감시운동의 준비기로 삼고 상반기에는 국가재정,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확보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음. 하반기에는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만들면서 국가재정 감시활동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했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체형성, 의제정리 등의 준비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는 못했음.

● 주요활동

- 2011년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예산안 분석을 위해 내부 관련 활동기구와 타 재정감시 단체들과 공동대응 모색. 국회 예산안 논의 시점에 시민경제위원회, 조세개혁센터, 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평화군축센터 공동 '예산안 분석 보고서' 제작, 발표
- 4대강저지범대위에 참여하여 4대강 예산 공동 분석과 이슈 제기를 위한 토론회 개최, 민생 대안 예산 발표 등
-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 이후 날치기 예산안의 문제점을 정리한 소책자 발간
- 2012년으로 예정된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 입장 유지, 대기업에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대표적 부자세인 증부세의 사실상 폐지 움직임 등 부자감세 기조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10-8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 목표와 방향

- 집권여당 심판 전면화 : 독선독주 중단, 국정운영 전면 전환
- 지방권력 교체 : 일당체제 심판, 지방자치 혁신
-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등 핵심이슈에 대한 전국 공동행동 추진
-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법 개정운동 전개

● 약평

- 4대강, 친환경 무상급식 등 6.2 지방선거 핵심쟁점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시민단체 지방선거 공동대응 기구인 '유권자희망연대'를 결성하여 각종 쟁점 형성과 시민행동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기여했음.
- 경찰청의 관련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규제하는 선거법에 대한 문제제기, 선관위의 불공정 편파 선거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선관위 개혁과 선거법 개정운동의 토대를 마련했음.

● 주요활동

-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포괄적 정책협약 체결, 서울지역 교육감 후보 추천 및 지지운동 진행
-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공동 캠페인 진행
- 복지, 주거, 재정, 환경, 고용, 행정거버넌스, 광장 정책에 대한 서울시정평가 보고서 발표
- Yes-Vote 캠페인단 구성, 투표약속 인증샷 등 투표참여 캠페인, 구 단위의 시민단체 회원모임 커피파티 진행
- 선거법 개정운동과 관련 부정 불공정 선거 대응 활동 진행

10-9 한반도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군축을 위한 운동

● 목표와 방향

- 남북 군사대결과 주변국 군비경쟁 완화를 위한 군축캠페인 기획 추진
-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위한 시민대안 마련 착수
- 한반도와 동북아비핵지대화 위한 한미일 의화-시민사회 협력사업 기획 추진

● 약평

- 한반도 평화체제 대안 마련은 천안함 사건 등 돌발 정세 대응에 집중하느라 최소한만 진행되었지만 평화체제 논의의 필요성과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
-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외교안보의 투명성과 책임성',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의제화하고 비판적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음.
- 비핵군축 캠페인, 국제회의의 참여를 통해 한반도 동북아 비핵군축에 대한 국내외 주체들과의 다각적인 연대를 형성함.

● 주요활동

- 〈2010핵군축보고서〉발간, 유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참여,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위한 한일의원-시민사회 교환워크숍 등 동북아비핵지대화와 핵군축을 위한 운동
- 평화단체들과 연대한 대중적인 군축캠페인인 '2010평화군축박람회-지금 평화를 이야기합시다' 개최와 평화군축활동가 워크숍 개최
- 동북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군비동결(Pacific Freeze)캠페인과 국제워크숍 진행
- 천안함 사건 정부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안보 기밀주의에 대해 문제제기 하면서, 관련 정보의 공개,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활동 전개. 이 과정에서 유엔안보리에 천안함 조사결과의 의문점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서한 발송
- 2010년 평화체제 관련 연구, 공부모임 진행

10-10 참여연대 의사결정 및 소통구조 강화와 혁신

● 목표와 방향

- 추천 운영위원 선출 준비
- 참여연대 각 기구별 책임 강화를 위한 연구

● 약평

- 2010년 총회에서 결의한대로 회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위해 회원모니터단, 추천직 운영위원 체계를 마련했고, 2011년부터 활동하게 될 500명의 회원모니터단과 20명의 추천직 운영위원 구성을 완료했음.
- 견제와 균형 확립, 각 집행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여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중첩된 역할을 분리하고, 각각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음.

● 주요활동

- 거주지역, 연령, 가입연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임기 2년의 '500명 회원모니터단' 구성
- 당연직, 선출직, 추천직 운영위원의 비율을 1:1:1로 정하고, 이중 추천직 운영위원을 회원모니터단 중에 추천하여 20명으로 구성했음. 임기 2년, 여성위원 40% '의사결정 및 소통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한 TF' 구성, 운영위와 집행위의 역할 분리 등의 정관개정안 마련을 마련했고, 2011년 총회에 제안

의정감시센터

● 2010년 목표와 방향

- 국회 모니터링의 방향과 방법론 재정비하여 국회감시 전문 기관으로 위상 제고
- 지방선거에 맞춰 출마자 정보제공, 정책평가, 유권자행동 등 선거대응 활동 진행
-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제화, 입법 운동 전개
- 열려라국회, 의정감시센터 블로그 의원평가 콘텐츠 강화

● 주요활동과 약평

- 상반기 중에는 <2010 유권자희망연대>에 전원 결합하여 유권자운동 조직과 기획, 정책평가에 참여했고, 특히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거관리의 불공정성을 제기하기 위한 공개질의, 이슈리포트 발표, 토론회, 기고, 입법청원, 규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여 시민사회 내의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음.
- 무상급식연대, 4대강저지범대위 등 유권자 운동에 대한 선거재판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선거법 개정 여론을 형성하고, 2011년 중점 활동으로 추진할 예정
- 의정평가 활동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 내부 토론을 거쳐 참여연대 입법과제를 중요의안으로 선정하고, 본회의 투표 결과를 종합해 지수화하는 방식의 의정평가 초벌 기획안 마련
- 2011년에는 18대 국회에서 참여연대가 입장을 가졌던 법안 150여개 중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된 30여개 법안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전문가, 회원의 평가절차 거쳐 발표할 계획
- 열려라국회 의정 DB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2011년 개편을 목표로 참여연대 국회 감시활동과 입법 활동의 콘텐츠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편 기획안 마련했음. 2010년 10월, DAUM과 열려라국회 의정활동 데이터제공 협약 체결

행정감시센터

● 2010년 목표와 방향

- MB의 일방적 독주와 불법에 대한 역사적 기록
- 4대강 사업에 대한 의미 있는 문제 제기
- 국정원, 경찰 등 공안기구들의 민주주의 파괴행위 감시
- 서울시정 감시활동의 단초 마련

● 주요활동과 약평

- 2월에는 이명박 정부 2년 기억해야할 공직자 40인 이슈리포트,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이슈리포트의 기획 책임을 맡아 참여연대 차원의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진행, 하반기에는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발간
- 국정원의 조계사 압력행위 고발,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임명 촉구, 조흥회 서울국제청장 뇌물수수혐의,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양천경찰서 경찰의 피의자 고문사건과 경찰의 음향대포 도입에 대해 문제제기,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활동에 집중했으나 효과는 미미했음.
- 지방선거에서 서울광장조례개정 거부한 시의원과 시장 명단 발표, 시의회 구성 후 서울광장 조례개정 로비활동, 서울시 서울광장조례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반대운동, 백서 기획 등 서울광장조례개정 후속활동 진행
- 8월 개각 이후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등 부적격 공직후보자 사퇴 운동 진행,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정리
- SK텔레콤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로비 의혹에 대한 제보접수 후 고발, 12월 15일 <제1회 공익제보자의 밤 -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행사를 개최하여 김종익, 김이태, 김동일씨 등 7명 의인상 시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입법청원, 공무원노조, 정보공개센터, 예산감시센터, 조승수 의원실과 공동으로 투명사회 5대 법안 입법 발의 진행
- 4대강 사업 대응활동은 초점을 예산감시로 전환하여 관련 업무를 시민경제위원회로 이관했음.

사법감시센터

● 2010년 목표와 방향

- 중단 없는 검찰감시와 검찰개혁 논의 불씨 이어가기
- 바람직한 대법관 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형성
- 사법감시센터의 전형적 고유사업 복원 및 시도
- 단순발표에 그치고 있는 기획조사보고서 활용실태 개선

● 주요활동과 약평

-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 역대 특별검사제 평가 보고서, 역대 검찰비리 보고서,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죄 조항 남용 보고서 발표,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 및 처벌촉구 활동 진행,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 검찰개혁 의견서 제출 등 검찰에 대한 비판과 개혁을 위한 제안 활동을 진행
- 2011년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대폭 교체기를 앞두고, 바람직한 대법관 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기 위해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 평가 및 신임 대법관 제청에 대한 토론회, 김영란 대법관 판결 평가보고서 발표 등을 진행했음.
- 판결비평 재개(5회), 사법감시 재발행(2회), 검찰감시DB 〈그 사건 그 검사〉 구축 시작, 변호사 징계정보 웹DB 운영, 국민참여재판 시민방청 7회
- 퇴직 법원장 사건수임 현황 보고서, 변호사징계 보고서 등의 기획조사보고서를 대상 기관, 인사, 국회 법사위 등에 전달,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에 기증하여 연구자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신영철 재판간섭 사태 1주년 기획 사업으로 자료모음집 제작하여 대법원에 전달, 시민 엽서보내기, 관련 단체 공동 성명 조직 등을 진행했고, 사형집행 재개 반대 연대활동,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권위 파행운영에 대한 연대활동에 참여했음.

공익법센터

● 2010년 목표와 방향

- 표현의 자유 영역의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한 공익소송 제기, 선(善)판례 축적
- 활발한 공익소송에 로스쿨생, 사법연수원생들 결합, 공익활동의 모범을 보여주고 공익활동에 참여, 연계할 수 있게 함.

● 주요활동과 약평

- 상근 변호사가 없는 조건에서도 뜻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평균 2개월에 1개 꼴로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에 대한 공익소송 제기
- 그 외에도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에 대해 공개변론, 박원순 변호사 소송, 역사교과서 수정지시 행정소송 지원 활동을 진행했음.
- 사법연수원생 변호사 실무대체 프로그램, 서울대 로스쿨생 실습 프로그램 통해 기초자료 조사, 의견서 초안 작성, 소장 작성 등 진행, 공익법 운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고, 전문적인 도움도 얻었음.
- 공익법센터 창립 10주년을 맞아 비정규직, 도시빈민, 농민, 여성, 미성년 학생 등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인 사람들이 저항을 통해 현실을 개혁한 13개의 이야기를 담은 단행본 〈호모 레지스탕스 -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발간, 인세는 공익법센터에서 기부 받았음.
- 통신의자유와비밀보호법 개정안, 야간집회금지조항삽입 집시법 개정안,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에 대한 의견서 제출, 특히 집시법 개정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활동, 법학자 선언 조직 등을 진행하여 개악 저지에 일조했음.

사회복지위원회

● 2010년 목표와 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실현
- 복지담론 확산을 위한 교육, 출판사업의 강화
-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지방선거 대응
- 담론세미나를 통한 복지국가 이행전략 마련
-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 사회권 영역으로의 사업 확대 가능성 모색

● 주요활동과 약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위해 성북구 장수마을과 동자동 쪽방에서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살아가는 체험 캠페인 〈희망UP캠페인〉 진행
- 〈대학생 대상 희망복지학교〉와 〈시민대상 복지국가 강좌〉 진행, 참여도와 만족도 모두 높아 성공적이었음. 지속적인 강좌개설로 복지국가 논의의 지평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 지방선거에 맞춰 복지공약집 발간, '보편적 복지와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 3회 개최, '보편적 복지'를 지방선거의 중요한 의제로 부각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했음.
- 복지담론 세미나를 연간 총 13차례 진행, 복지국가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했음.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주요사업으로 설정했으나, 시민사회 내의 입장 차로 인해 활성화되지는 못했음.
- 사회권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아동권, 이주난민의 사회권,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등의 조사 작업을 하였고, 향후 본격적인 활동 기획을 만들어야 함.
- 그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에 대한 입장 발표 및 대응 활동 통해 수정고시의 성과 있었고,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표, 연대활동으로 기초노령연금 확대 위한 노인대회 개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진행했음.

노동사회위원회

● 2010년 목표와 방향

- 일자리 대안 담론형성 및 정책방향 제시
- 고용보험 개혁 및 실업부조 도입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 근로감독, 산업안전 등 노동행정 부분을 모니터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고발

● 주요활동과 약평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5% 청년채용 의무)'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공동 발의, 청년실업네트워크와 청년 일자리 캠페인 진행
-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구성,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고용보험법 개정 단일법안' 마련
- 노동행정 모니터를 강화하여 노동사회위원회의 차별성 있는 활동계획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공공부문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보고서' 외에 활성화되지 못했음.
- 다만 산업안전부분은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대한 이슈리포트 발표, 국정감사 대응,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여론에 호응을 얻었음.
- 취약계층노동자 근로실태 보고서 '현장리포트' 발표, 최저임금 결정 시기 맞춰 발표하여 효과적이었음. 다만, 현장 취재 등에 인력과 시간이 크게 소요되어 노동사회위원회 역량에 맞는 사업으로 변형이 필요함.
- '100대 기업 평가보고서' 발표로 지난 2년간 노동 분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표개발부터 기업평가까지 기획했던 사업을 마무리. 민주당 박선숙 의원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 공시를 법제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했음.
- 그 외에도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과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에서 시작된 노동자 공장 점거농성과 관련, 긴급토론회, 비상시국대회,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 면담 등을 추진했고, 인턴 대학생들과 퍼포먼스, 이슈제기형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을 진행했음.

민생희망본부

● 2010년 목표와 방향

-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등록금, 급식비, 사교육비 등 교육비로 인한 국민 부담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 이자폭리문제,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대응과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
- 재벌슈퍼(SSM) 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는 전국의 중소기업 살리기 캠페인 지속
- 이동통신요금 추가 인하 및 식품안전문제 등 소비자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 민생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한 다방면의 이슈리포트와 언론 기획 등

● 주요활동과 약평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결성, 주거분야 오세훈 시장 시정평가 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활동 진행
-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함께, 학자금 대출제도, 장학금 문제 등에 대한 여론화에 주력했고, 특히 1월부터 시행된 취업 후 상환제의 문제점, 저소득층 장학금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여 여론의 상당한 호응을 얻었음. 등록금 문제의 모든 것을 수록한 <미친 등록금의 나라> 단행본을 기획하여 2011년 1월에 출간했음.
- 연대기구에 적극 결합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을 2010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만드는데 기여, 하반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거부에 대한 대응 활동 진행했음.
- 상지대 사태와 비리재단 복귀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안 제출하여 폭리 근절 공론화에 기여, 1가구 1주택 과중채무자들을 위한 파산법 개정 청원안 제출
- 중소기업살리기전국네트워크의 사무처 단체로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을 책임있게 수행했고, 유통산업발전법 및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성과 있었음.
- 브론산업 과다함유 생수제품 정보공개청구소송에 승소, 민변과 한거래21이 선정하는 올해의 판결에 선정되었음.

시민경제위원회

● 2010년 목표와 방향

-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지원하는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모니터 및 금융정책에 대한 감시 강화
- 주로 대기업간 부당공동행위인 담합에 대한 기획공익소송 제기를 통해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을 사회적·제도적으로 마련해가는 원년으로 삼음

● 주요활동과 약평

- 금산분리 완화의 최종관이자 지주회사의 장점을 무효화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반대 운동 진행, 납품단가연동제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마련
- G20 서울정상회의를 맞아 '금융과 자본규제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활동에 참여, 3회 국제심포지엄과 토론회, 기자회견 등 공동 활동을 진행하고, 국제연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시민강좌 진행. 은행의 겸업화를 금지하여 금산분리 강화, 금융거래세와 은행세 도입, 민생·복지 재정지출 확대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음.
- 상반기 <2010 한국경제를 말하다> 시민경제교실, 하반기 한국경제정책연구회, 경제개혁연대, 정치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2010 시민경제강좌> 진행
- 7월말 총 27명 원고인단을 모집해 SK가스 및 SK에너지를 상대로 공익소송제기, 담합 규제책인 과징금의 실효성에 대한 이슈리포트 발표, 국감에서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금리 담합과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의혹 등에 대해 문제제기
- 5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위해 청구인단 모집, 국가재정 낭비에 경각심이 높다는 점을 확인 (국민감사청구는 감사원으로부터 법절차상 문제 없어 종결 처분). 하반기 4대강저지범대위 활동에 결합하면서 4대강 사업 예산 분석과 토론회, 농성 참여, 날치기 예산처리에 대한 규탄 대응 진행

조세개혁센터

● 2010년 목표와 방향

- 국가재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담론, 전략의 입안
- 세제개편, 정부예산편성, 국회예산심의 등 재정예산관련 계기에 능동적 개입함으로써 사업기반의 마련

● 주요활동과 약평

- 상반기 국가재정,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확보 위한 전문가 간담회, 하반기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 세제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부자감세 현황과 실태 정리,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인하, 종부세 완전 폐지 시도, 임시투자공제제도 재연장 시도 등에 대한 대응 활동을 진행. 특히, 하반기 국감, 세제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임투공제가 연장되는 과정에서 1인 시위, 입장발표 등 집중활동 진행, 부자감세 논의는 2011년이 고비일 것으로 예상, 집중 활동 기획할 예정
- 정기국회를 겨냥한 정책자료집, 예산안 분석보고서,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안·법률안 홍보 소책자 제작 등을 통해 부자감세 철회 요구를 하였음.
- 재정조세개혁센터(가칭)로의 확대 재편은 핵심 전문가의 안식년 등으로 2011년 과제로 이월

평화군축센터

● 2010년 목표와 방향

- 한반도 평화체제 시민방안 제시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감시 강화 및 남북민간교류 촉진
- 비핵군축운동의 전형 마련
- 기여외교 및 해외군사개입 감시활동 지속

● 주요활동과 약평

-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조사과정과 결과의 문제점과 의문점을 지적하는 4건의 이슈리포트와 1건의 영문리포트 발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 발송, 국정조사 요구, 천안함 관련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부 조사과정에서의 과도한 정보통제와 잇단 말바꾸기에 문제제기하고 조사결과에 남아있는 의문점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 전개
-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교전을 거치면서 고조되어온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대화를 통해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붕괴를 겨냥한 급변사태계획과 군사훈련, 흡수통일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대북압박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는 논평과 연대성명 등 진행
- 평화군축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과도한 군비를 줄여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비인도적인 무기의 생산과 판매를 국제적으로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평화군축박람회를 조계사와 국회에서 14개 평화단체와 공동개최, 정기국회때 국방예산 분석 보고서 발표
-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전문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군비동결캠페인(Pacific Freeze)과 국제워크숍,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위한 한일의원-시민사회 포럼 개최, 한미일 컨퍼런스 개최, 2010핵군축보고서 발표 등 비핵군축을 위한 국제연대를 활발히 전개
- 아프간 PRT(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지역재건팀) 파견에 대해 집회, 홍보활동, 토론회,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UAE 파병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국회토론회, 방송토론, 기자회견, 릴레이 기고 등을 진행했음.
- 그 외에도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보고서 발표, 외교국방 관료 인사청문회 모니터, 평화백서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했음.

국제연대위원회

● 2010년 목표와 방향

- 아시아 네트워크 멤버십 강화 및 활동기구별 국제연대활동 기반 정비
-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연대를 위한 참여연대 정책과 사업체계 마련
- 상반기 한국 대외원조 정책 및 기본법에 대한 감시 활동 진행
-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에 한국시민사회 전략구상과 대안제시

● 주요활동과 약평

- 포럼아시아와 같은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인 아시아연대 활동 준비, 포럼아시아 동북아 집행위 단체가 된 후 첫 번째 공동 사업으로 광주아시아포럼 『아시아 민주주의-공고화인가 혹은 위기인가』 워크숍 개최. 포럼아시아를 비롯해 아시아 단체들과 민주주의와 권력 감시를 위한 네트워크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sia, SDMA) 결성. 2011년 9.11, 10년을 조망하는 공동 기획 논의 중
- 권력감시 활동 기구의 국제연대 방향을 모색하면서 아시아 권력감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음. 광주아시아포럼 통해 사법감시 활동의 국제연대 가능성 확인, 아시아 지역 사법감시 단체들과의 교류, 활동공유, 방법론에 관한 교육 등 추진할 계획
- 한국의 유상원조의 문제점을 다룬 보고서와 연례 정책보고서는 ODA 정책을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음.
- G20을 앞두고 국제개발협력단체 활동가 입국불허 포함 외국인 강제추방에 대해 공개질의서, 항의 성명 등을 통해 적극 대응했음.
- 2011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 개최에 앞서 '국제개발협력 한국시민사회포럼(KoFID)' 창립을 공동제안, 구체적인 활동은 2011년 본격화 될 예정

아카데미 느티나무

● 2010년 목표와 방향

- 올바른 역사인식을 돕는 시민교육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
- 참여연대 시민교육 역량 강화
- (수강)회원 서비스 및 멤버십 강화

● 주요활동과 약평

- 연간 35개 강좌, 1,000여명의 수강생, 5,000회의 시민방문, 160여명 회원가입, 약 1,340만 원 강좌수익 등이 발생, 참여연대 회원가입과 회원활동의 주요한 축으로, 명실상부한 시민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과거사, 한국전쟁 60년, 광주 30년, 전태일 40주년 기념 강좌 진행, 130여명 수강. 민주주의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역사 강좌로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함.
- 다양한 주제와 영역의 강좌 - 에로스, 몸 워크숍, 사진강좌, 남자 40대, 꿈, 맥주, 우크렐레 레슨, 표현예술 워크숍 등 - 를 개설하여 참여연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외연확대에 기여
- 활동기구 주관으로 6개 강좌 - 한국경제, 아시아, G20, 부동산, 복지국가, 전태일 40년 - 개설, 참여연대 콘텐츠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수강생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수강관리 페이지 정비,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정비 작업 진행하였음. 여름강좌로 진행된 <김수행 교수의 국부론 읽기> 강좌를 온라인 강좌로 오픈, 가을강좌부터 중복 수강자를 중심으로 강좌 서포터즈 운영하면서 멤버십 형성에 주력하고 있음.
- 아카데미의 지역단체 시민교육 지원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518재단 협력 사업을 통해 대전·대구 참여연대 강좌 사업비 지원, 전북참여연대, 익산미디어센터 강좌기획 지원, 대구·전북 참여연대 아카데미 강사 추천 등) 서울을 넘어 지역의 시민교육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참여사회연구소

● 2010년 목표와 방향

- <시민과 세계>의 혁신을 통한 독자 증가
- 참여사회포럼의 활성화
- 연구센터의 안착
- 시민사회 연구기반 마련
-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시도

● 주요활동과 약평

- <시민과 세계>는 구독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16호를 혁신준비호로 제작, 서점 판매량 증가는 없었지만, 전자학술저널 사이트를 운영하는 누리미디어 저작권 정산 결과, 2009년 대비 2010년 매출액(48,598→2,512,065)과 저작권료(19,540→502,413)는 모두 26배 증가했음. 연구자들에게 가독성이 있는 잡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평가할 수 있겠음.
- 새롭게 시도한 저자와의 대화 형식의 '참여사회포럼 : 대화' 3회 진행. [참여사회포럼: 대화#1] 박호성 교수의 <공동체론>, [참여사회포럼: 대화#2] 안경환 교수의 '경제 제일주의 시대의 한국사회의 인권', [참여사회포럼: 대화#3] 황지우 시인에게 듣는 '창의성의 문화적 상상력: 불통의 시대를 넘어서'. 시의적절한 저자 선정으로 수강생이 꾸준히 늘고 있고, <시민과 세계>의 주요 섹션으로도 자리 잡았음.
- 현안에 대한 포럼은 1월 세종시, 3월 무상급식을 주제로 2차례 개최했으나, 활동기구의 속도와 기획력을 따라가지 못했고, 현안보다는 담론과 이론중심으로 기획하는 것이 낮았다는 평가를 내렸음.
- 8월 <행복한 경제교육을 위한 다섯 가지 질문>, 11월 <경제, 바로 보면 보입니다>를 주제로 교사 직무연수 진행, 여름 연수는 한 달 전에 마감,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진 겨울연수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음. 참가자들과 서울시교육연수원 실사에서도 긍정 평가를 받고 있음.

시민참여팀

● 2010년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회원배가를 위해 적극적인 계획과 목표 마련
- 〈맞춤형 회원참여 프로그램〉 〈이슈대응 회원 캠페인〉으로 더 많은 소통과 참여
- 미래희망, 참여연대 대학생조직 모색
- 섬세하고 체계적인 자원활동망 구축

● 주요활동과 약평

- 회원 확대 기획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6월 천안함 사건으로 회원가입 폭증. 희망UP캠페인 등 호응이 높은 캠페인을 회원확대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문제
- 탈퇴회원 역시 전년도에 비해 늘었는데 회원유지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부족했음. 참여연대 중점사업을 회원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 마련, 탈퇴자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지방선거 지역별 유권자 모임 커피파티, 천안함 사태 회원 응원광고, 4대강 사업 현장 이포보 방문, 4대강사업 반대 인간띠잇기 참여 등 회원참여행사 진행, 단발성 기획으로 이슈대응 캠페인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 현안대응 수준이 아닌 지속적인 캠페인을 기획해야 함.
- 연령, 지역을 고려한 회원참여프로그램도 내부 역량 감안해 추진해야 함
- 참여연대 대학생 모임 구성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인턴 참가자 및 대학생 회원 중심의 논의 모임을 가동했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 우선적으로 기존 인턴 프로그램 개선에 집중할 예정
- 2008년 이후 자원활동가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데이터 관리, 수요에 기반한 모집과 배치, 만족감, 유대감 증진을 위한 방안을 기획하지 못했음. 2011년에는 집중적으로 역량을 배치할 예정

커뮤니케이션팀

● 2010년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에게 맞는 소통방법 찾기 : 목표와 방법
- 참여연대의 가치와 활동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제작
- 시민이 참여연대 자료를 편하게 이용하도록 자료 체계 정비

● 주요활동과 약평

- 참여연대 소통 전략 수립과 홍보 업무 체계화를 위해 상반기 3개월 간 팀내 비전 워크숍 진행, 홍보 업무의 목록을 정식화했음.
- 참여연대 기본홍보물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했지만, 회원가입서, 연차보고서 등을 수정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편이 진행됐고, 활동기구 소개를 위한 홈페이지 보완은 진행 중임.
- 그 외에도 6.2 지방선거, 4대강 사업 반대 활동, 천안함 침몰 사건 대응, 국회 예산안 날치기 대응 등 참여연대 주요 사업과 연대활동의 홍보사업을 적극 지원했음.
- 참여연대가 생산하는 방대한 콘텐츠 DB체계 정비하고, E-book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내부 역량 부족으로 중단, 2011년에 재가동할 예정
- 〈월간 참여사회〉는 시의성 있는 주제기획, 이슈메이커 인물 인터뷰 기사를 통해 전년도보다 주 독자 회원들의 관심과 피드백 강화, 그 외에도 희귀본 서평, 동화책 서평, 문화 강좌, 생활경제상식 등의 교양, 정보 차원의 기획 보강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 〈피플티비〉는 지방선거 투표참여 독려, 검찰과 스포스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저생계비 현장체험 등 인터넷 라디오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현안대응으로는 의미있었으나 매체로서의 지속성 유지에 어려움이 확인됨. 그 외에도 외부 인터넷방송과 연계하여 전보다 쉽게 생중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음.
- 격주 온라인 소식지 〈통인동 뉴스레터〉 31호까지 발행

● 2010년 목표와 방향

- 재정 안정화 사업을 위한 실행 단위 구성과 새로운 모금 방법 실험
- 후원자 관계 맺기 체계 마련과 연간 사업 정식화
- 전·현직 임원들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임원 조직 활성화 사업 시도
- 상근 활동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점검과 핵심 역량 교육 강화
- 활동 지원 업무의 안정화를 위한 관리 매뉴얼 정비

● 주요활동과 약평

- 후원자예우프로그램, 부서후원행사, 작은모임, 창립기념 후원행사, 기타 온라인 모금 등 사무처 내 재정 담당자를 두고 연간재정 사업을 진행하였고, 재정기획위원회 월례 정기회의가 안정화되었음.
- 〈사법감시〉 재발행을 위한 사법감시센터 후원행사 기획 및 지원을 하였고, 모금목표 1천 만 원 초과 달성했음. 창립기념 후원행사는 목표 달성, 네이버 해피빈 모금은 소규모 단체 중심으로 네이버측 정책 변경으로 목표 조정이 필요함.
- 임원데이터 정비, 고문모임, 집행위워크숍 등의 회의는 정례화되었고, 임원디비 정비 진행 중
- 상근 활동가 교육 내실화를 위해 세미나모임 지원과 외부교육신청 등 개인별 요구에 따른 지원을 강화했고, 직무교육도 안정화되었음. 중견, 고연차 활동가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상근자 인사기록관리, 임원데이터 관리 등 인사기록과 체계 정비하였음.

연대활동

●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최초의 연대체인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에서 정책당당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했음. 정기국회에서 SSM에 대한 일부 규제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을 이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전국 상인들의 민주적 조직 '전국유통상인연합회'를 결성했음. 앞으로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상인단체들과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을 진행할 계획임.

● 등록금 등 과도한 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

등록금 등 과도한 교육비 해결을 위해 등록금넷, 교육시민단체들과 대국회 활동을 벌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등록금 인상을 상한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음. 또 부족하지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등록금 후불제)'도 시행되고 있음. 2011년 1월에는 등록금 문제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단행본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발간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음.

●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

상반기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급식연대) 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방선거에서 공약 채택 운동을 친환경 무상급식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를 만들었음. 참여연대는 향후에도 급식연대와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 결식아동 급식확대를 위한 교육·아동단체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

● 민주진보 교육감 추천 운동과 교육정책 개선 운동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서울지역의 민주진보 교육감 선출을 위한 시민추대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상지대 등 사립학교 비리재단 복귀 반대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음.

● 서민입법과 민생예산 확대 위한 공동 활동

국회가 열릴 때마다 서민 입법의 당사자들과 입법 과제를 공론화하는데 공조했고, 예산대응을 위해 연대활동을 벌였음. 특히 작년 정기국회 예산안 날치기 이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생 예산 대폭 삭감을 이슈화하고, 추경편성을 촉구하는 활동을 기획하였음.

● 4대강 사업 저지 운동

상반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공사현장 답사, 유권자 행동 등을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예산낭비에 초점을 맞춰 4대강 사업저지범대위 활동에 결합했음. 4대강 사업 예산 분석 및 문제예산에 대한 시민토론회 개최, 대안예산 이슈화, 예산안 처리 저지 농성 참가, 날치기 통과 규탄 활동 등을 진행하였음.

●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활동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홍보하는 방위산업박람회나 에어쇼 등에 문제제기를 하고 시민캠페인을 하기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13개 단체들이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구성. 비핵군축평화 과제를 검토하기 위한 활동가 워크숍을 열었고, 60개의 판넬을 제작하여 조계사, 국회, 거리 등에서 전시했음.

● 비핵화 라운드테이블 활동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비핵지대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5개 단체가 비핵화 라운드테이블 결성, 한반도와 동북아 비핵화에 관한 시민사회 입장 조율, 의원들의 관심과 역할 부여, 한일 의원과 시민사회 교류까지 조직했음. 그 외에도 NPT(핵확산방지조약) 특강, 한미원자력협정과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다룬 비핵화월례포럼을 진행했음.

● G20 정상회의 대응 활동

80여개 노동민중시민단체들과 함께 G20민중행동을 결성해 참여연대는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아 국제민중회의, 민중행동 등 공동사업 추진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 국제연대 차원에서 재정금융개발에 관한 국제회의를 공동 기획했으며, 필리핀의 IBON재단과 미국의 정책연구소(IPS),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국제통상감시네트워크(OWINFS)와 협력관계를 형성함. 또한 G20 금융, 경제 이슈와 관련해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에 결합하여 금융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포럼을 진행했음.

연대기구 가입현황 2011. 3. 5. 현재

● 국내연대 41개

참여연대 공동체 2개

대구참여연대

경기북부 참여연대

상설연대기구 10개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 (KoFID)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 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한시적연대기구 41개

연대기구명	가입년도	관련 활동기구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2009	정책기획팀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	2008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2010	노동사회위원회
공교육 살리기 연석회의	2008	민생희망본부
공무원 교사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2009	노동사회위원회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	2010	행정감시센터
식품안전과 광우병위험 감시 국민행동(가) *이전 :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2008	
교육비리추방 범국민운동본부(가)	2010	민생희망본부
국제인권네트워크	2009	국제연대위원회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2010	시민경제위원회
금융 소비자 권리찾기 연석회의	2010	민생희망본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	2010	사회복지위원회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9	민생희망본부
날치기 폭거 무효, 민생 예산 회복 MB·한나라당 독주 심판 제 정당·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2010	정책기획팀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2003	민생희망본부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2008	민생희망본부
민생민주국민회의	2009	민생희망본부
민주진보 서울시 교육감 추대위원회	2009	민생희망본부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 캠페인단	2009	행정감시센터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준)	2010	민생희망본부
서울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본부	2010	민생희망본부
수도권 과밀문제 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	2006	
아프간 재파병 반대 연석회의	2009	평화군축센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09	민생희망본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2005	평화군축센터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2007	사회복지위원회
문화백지화국민행동	2008	
유엔 사회권규약 반박보고서 작성 NGO 네트워크	2008	사회복지위원회
의료급여개혁 공동행동	2007	사회복지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2009	사회복지위원회
재개발행정개혁포럼	2010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2009	민생희망본부
최저임금연대	2002	노동사회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2010	민생희망본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2001	
토지구획공공성 네트워크	2007	민생희망본부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2010	평화군축센터
평화활동가대회 준비위원회	2004	평화군축센터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2006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	2010	평화군축센터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2010	민생희망본부

● 국제연대 ^{6개}

- ANFREL (The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세계시민단체연합)
- Forum-A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포럼아시아)
- GPPAC Northeast Asia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the Armed Conflict, 동북아 무장갈등예방 글로벌파트너십)
- ROA (Reality of Aid, 국제원조네트워크)
- SDMA (Solidarity for Democratic Movement in Asia,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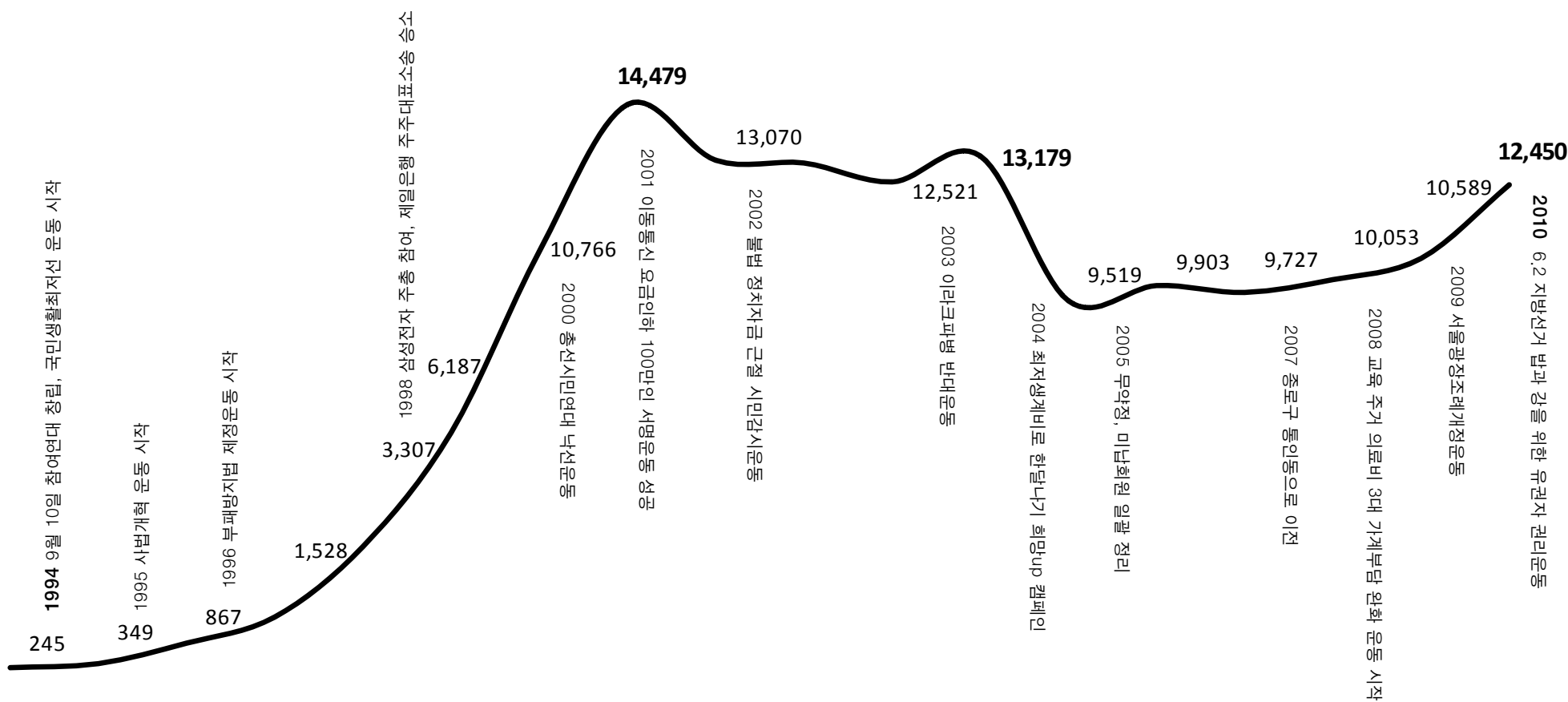
● 2010년 가입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공간기구감시 네트워크, 교육비리추방 범국민운동본부(가),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금융 소비자 권리찾기 연석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 날치기 폭거 무효, 민생 예산 회복 MB·한나라당 독주 심판 제 정당·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준), 서울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본부,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세계시민단체연합), ROA (Reality of Aid, 국제원조네트워크), SDMA (Solidarity for Democratic Movement in Asia,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 2010년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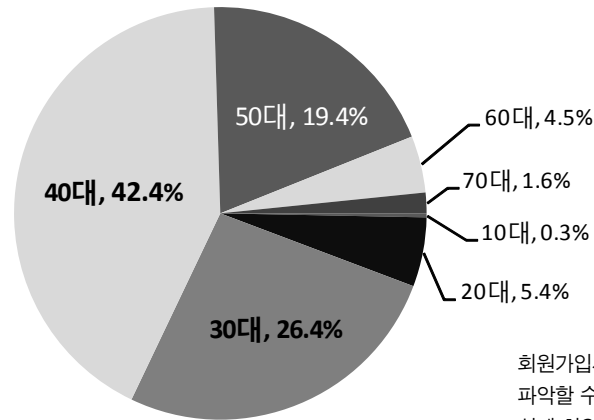
유엔 사회권규약 반박보고서 작성 NGO 네트워크

1994-2010 연도별 회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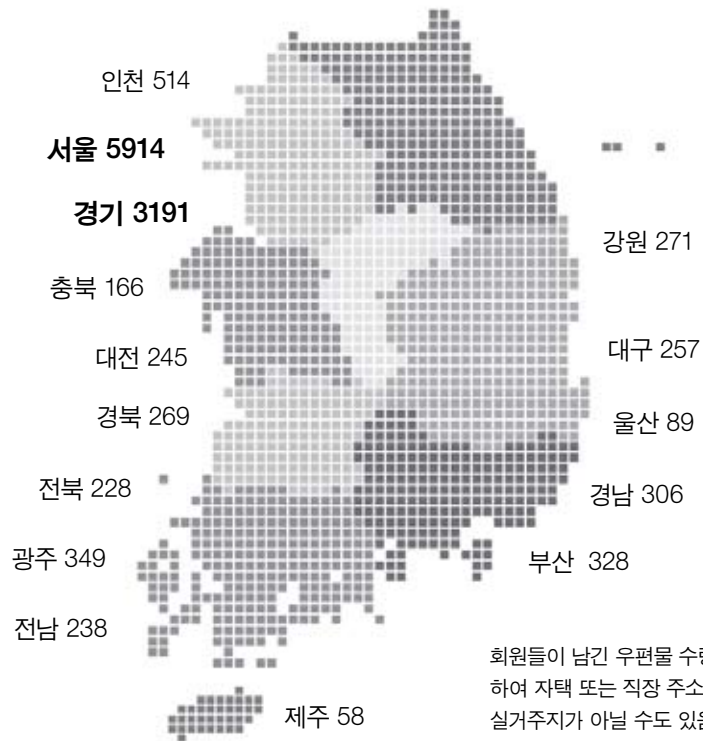


2010 연령·지역별 회원분포

2010년 말 현재 회원 12,4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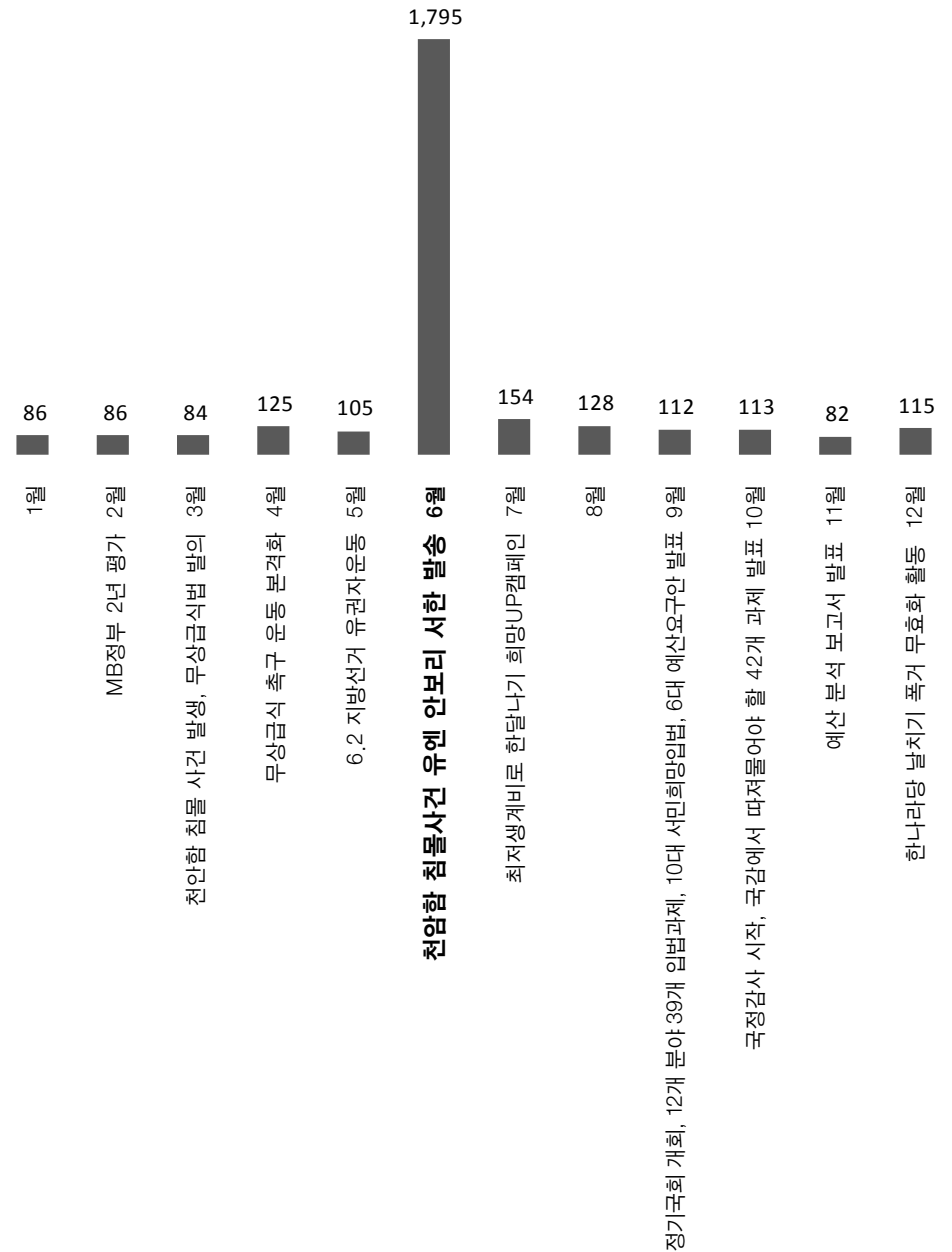
회원가입시 입력(통지)한 생년을 기준으로 나이를 파악할 수 있는 회원 12185명만을 대상, 실제 회원수 보다 약 300여명 적은 수치임



회원들이 남긴 우편물 수령 주소 등을 근거로 하여 자택 또는 직장 주소에 근거한 바, 실거주지가 아닐 수도 있음

2010 월별 가입회원 수

2010년 총 2,985명 가입



감시와 정책제안

활동구분	내용	활동량
● 보고서	정책 제안	104
	실태 조사	97
	인사검증	20
	총계	221
● 정책 토론	토론회	68
	포럼	9
	간담회	7
	기타	6
	총계	90
● 입법청원	법률청원	18
	조례청원	0
	기타	4
	총계	22
● 소송	고소고발	15
	기타소송*	7
	위헌소송	3
	총계	25
● 행정처분요구	감사청구	2
	정보공개청구**	2
	기타(민원/진정)	1
	총계	5

● 직접행동	집회/시위	31
	캠페인***	14
	기타 방문/면담,서한,질의서,온라인행동	40
	총계	85
● 미디어 기획	기자회견	158
	칼럼/기고	177
	공동기획기사	2
	기타	46
	총계	383
● 성명/논평	성명	130
	논평	270
	총계	400

*기타소송 : 민사, 행정소송

**정보공개청구 : 이슈제기를 위한 기획성 정보공개청구 건수,
일상적 정보공개청구는 매년 100여건 이상

***캠페인 :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촛불사건재판,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한 신영철 판사 사퇴촉구 엽서 250여 장 전달, 스폰서 검사
국민감사청구인 모집, 천안함 정보공개 시민청구인단 1200명 모집, 32만 시민
친환경무상급식 서명 참여, 4대강 사업저지 위한 100인 1인 시위, 평화군축박람회,
오세훈 시장 시민의견청취 거부에 항의하는 그림자 시위 등

도시와 영상물

● 정기간행물 28개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1월호-12월호)

참여연대 | the DNC

월간 복지동향 (1월호-12월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도서출판 나눔의집 | 3,500원(1년 35,000원)

시민과세계 (제17호)

(사)참여사회연구소 | 도서출판 사회평론 | 15,000원

발행일 : 2010년 6월 30일

시민과세계 (제18호)

(사)참여사회연구소 | 도서출판 사회평론 | 15,000원

발행일 : 2010년 12월 15일

사법감시 (제29호)

퇴행하는 한국 검찰 -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행일 : 2010년 3월 9일

사법감시 (제30호)

2010 일그러진 법조 삼륜의 자화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행일 : 2010년 11월 29일

● 단행본 6개



미친 등록금의 나라

등록금의 뒷에 갇힌 청춘필패의 현실, 바꿀 수 있다
등록금넷, 참여연대 기획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집필
| 개마고원 | 13,000원 | 2011년 1월 14일



호모 레지스탕스 -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인 사람들이 저항을 통해 현실을
개혁한 13개의 이야기를 담은 책

박경신 박주민 양홍석 최종영 허진민 손익찬 최종연(지은이)
해피스토리 | 15,000원 | 2011년 1월 21일



허세욱 평전 : 별이 된 택시운전사

평범하고 바보같고 특별한 사람 허세욱 선생의 삶을 조명한 책
송기역 (지은이) | 12,000원 | 삶이보이는창 | 2010년 5월 1일



박상증과 에큐메니컬 운동

박상증 목사의 삶과 사상을 통해 알아본

에큐메니컬 운동의 정의와 의의

강주화 (지은이) | 삼인 | 20,000원 | 2010년 4월 30일



2010 평화백서

2009-2010 2년간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평화 활동 이야기

2010 평화백서 편집위원회 (엮은이) | 검등소 | 25,000원

2010년 3월 24일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안보, 마약밀매, 인신매매, 환경, 광역질병, 테러, 이주, 빈곤
등 아시아 초국가적인 문제 조명, 아시아 연대와 역할 모색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12,000원 | 2010년 11월 30일

● 영상물 50개

참여연대 주요사업, 연대사업 등 촬영, 기획영상 9편

- 광장조례개정서명 캠페인 영상 (3월)
- 참여연대 총회 영상 (3월)
- 대학생 등록금 캠페인 영상 (3월)
- 지방선거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 영상 (5월)
-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영상(6월)
- 최저생계비 캠페인 영상 (7~11월)
- 참여연대 후원의 밤 영상 (9월)
- 공익제보자의 밤 영상 (12월)

각종 토론회, 강연, 평가회 생방송 26회

-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3월)
- 참여연대 제16차 정기총회(3월)
- 광주 30년, 무엇을 할 것인가 한홍구 교수 강연(5월)
- 보편적 복지와 6.2 지방선거 토론회(5월)
- 촛불2주년, 왜곡으로 감출 수 없는 촛불운동의 진실 토론회(5월)
-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5월)
- 스폰서검사 의혹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평가(6월)
- 삼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 모색 토론회(6월)
- 스폰서검사 조사결과 긴급평가(6월)
- 선거법과 선거관리의 문제점 토론회(6월)
- 천안함 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6월)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불가피했나 토론회(7월)
- 친환경무상급식 실천 방안 토론회(7월)
-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관 공개 토론회(7월)
- 지방정부 재정 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7월)
- 현장토크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자와 함께(7월)
- NPT 체제와 이란, 비핵화라운드테이블 월레포럼(8월)

- 4대강 사업, 막을 수 있는가 9.11 국민행동 특집 토론회(9월)
- 무너지는 중산층·서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토론회(9월)
- 8.29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볼 것인가(9월)
- 국방부 '천안함 최종보고서'에 대한 긴급 토론회(9월)
- 투명 사회를 위한 반부패 제도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11월)
- 시민들과 함께하는 2011년 문제 예산 뜯어보기(11월)
-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11월)
- 청소노동자의 하루 밥 값 300원, 공정한 계약인가 토론회(2011년 1월)
- 서울광장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2011년 1월) 등

현장뉴스 11편

- 선관위, 정권의 홍위병 노릇 그만둬라 기자회견(4월)
- 부패·성매매 검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인단 모집 기자회견(5월)
- 교육부패와 사학비리 근절, 추방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5월)
- 국방부 주최 시민단체 대상 천안함 설명회(7월)
-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의혹 부실 수사 및 은폐의혹 규탄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11월)
- 입국불허 강제귀환된 폴 키토스 인터뷰(11월)
- 위기에 빠진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11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대적빈곤선 도입을 위한 기초법 개정 결의대회(11월)
- 2010년 정기국회 입법·예산요구 보고서 국회 전달식(11월) 등

피플라디오 파일럿 프로그램 4회

- 지방선거 투표참여 독려 파일럿 프로그램 2회
- 검찰과 스폰서 조사결과 관련 파일럿 시사프로그램
- 최저생계비 현장체험 파일럿 프로그램

추억의 회원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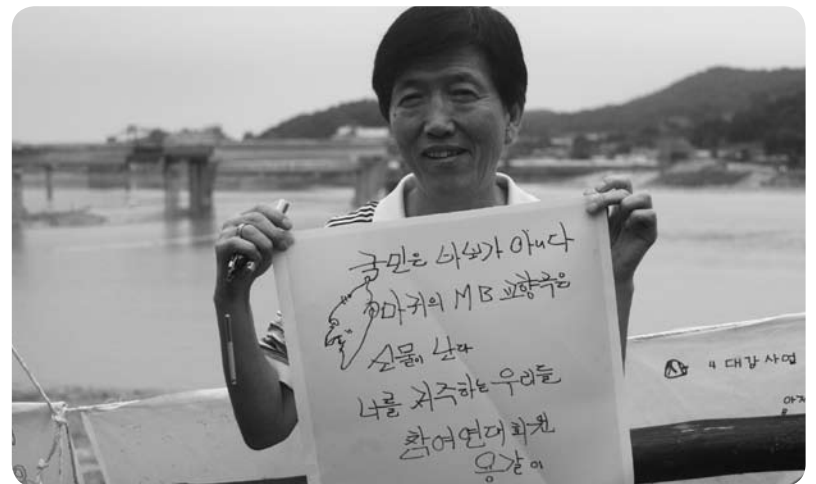
2010년 4월 24일 참여연대 봄답사 <남한강 물소리 따라 걷기>



2010년 7월 29일 여주 이포보 농성 지지 집회



2010년 5월 투표참여캠페인 "알고짜자, 커피번개"



2010년 8월 14일 여주 이포보 응원방문

2010년 9월
4대강 공사 중단 위한
10만 인간띠잇기 국민행동



2010년 10월 30~31일 참여연대 회원 MT



홀수 달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열리는 신입회원만찬



2010년 12월 16일 참여연대 송년회

유쾌한 인턴 활동

- 5기 인턴 / 2009년 12월 29일 - 2010년 2월 11일 / 18명 수료
20대 투표 참여 캠페인 <6월 2일 지방선거, 20대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꿔요> 12회 1603개의 20대 목소리를 담아 7개 정당에 전달



▲ 신촌에서 방준호 인턴이
요구안을 받는 장면

◀ 캠페인팀의 퍼포먼스

- 6기 인턴 / 2010년 6월 28일 ~ 2011년 8월 6일 / 16명 수료
청년실업 <청년층 고용한파, 우리 아직 떨고 있다> 캠페인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고용한파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을 드러내기 위해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겨울 복장을 하고 서울
곳곳에서 1인 시위와 캠페인

- 7기 인턴 / 2010년 12월 27일 ~ 2011년 2월 11일 / 15명 수료
한반도 평화 <평양행 기차표 나눠 드립니다> 캠페인



남북 대결구도 종식과
평화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만든
평양행 기차표 배포 캠페인 진행

2010년 1,000명의 시민을 만났습니다

- 2010년 35개 강좌
- 1,000여 명의 수강생
- 5,000여 회 시민방문
- 160여명 회원가입



시즌	구분	강좌명	참가자/강좌횟수
겨울	민주주의학교	시사평론가 김종배의 글쓰기 교실	30명/6회
	생활문화학교	오카리나 / 팬플룻 교실	6명/4회
	회원모임	임순례 감독과 함께 하는 두번째 마당	18명/1회
봄	개강행사	석탄으로 태백을 그린 화가, 황재형과의 만남	25명/1회
	오픈특강	언론인 정연주의 언론과 권력, 시민주권	64명/1회
	민주주의학교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	9명/6회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26명/6회
		[광주항쟁 30년 강좌] 80년 광주가 2010년 우리에게	22명/3회
		되살아나는 과거, 대한민국의 역주행	28명/6회
		한국전쟁의 재인식	43명/6회
	인문학교	서울, 도시와 공간의 인문학	32명/8회
		삶의 주인이 되는 돈의 인문학	33명/5회
	고전세미나	신화, 세상에 답하다 - 김원익의 그리스 신화이야기	24명/8회
		역사드라마, 사료로 다시보기	25명/8회
	생활문화학교	쉽게 즐기는 작은 기타 우쿨렐레 교실	12명/4회



여름	민주주의학교	굿모닝세미나	성찰과 치유를 위한 꿈작업	19명/10회
			철학, 삶을 사랑하는 지혜	18명/6회
			어른의 탄생 - 언론인 김선주와의 생생토크	19명/6회
			행복한 인생을 위한 착한 재무설계	11명/5회
가을	민주주의학교		지구정치경제학을 제안한다	15명/5회
			김수행 교수와 함께하는 <국부론>읽기	40명/4회
	생활문화학교		쉽게 즐기는 작은 기타, 우쿨렐레 교실	12명/4회
가을	오픈특강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과의 대화	40명/1회
			G20 토크아보기	28명/6회
	민주주의학교		부동산 뒤편에 걸린 한국사회를 말한다	21명/5회
			시민, 복지국가를 꿈꾸다	45명/6회
			전태일 열사 40주기 기획 강좌	36명/2회
	인문학교		시사평론가 김종배의 <시사 맥락 읽기>	25명/6회
			혁명과 헌법의 인문학	22명/6회
			디자인, 사회를 바꾸다	31명/5회
	고전세미나		비극의 이해-운명, 세상과 맞서다	31명/8회
			생애의 발견 시즌II: 자녀와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	18명/6회
가을	생활문화학교		남자 40대, 나대로 사는 법	12명/4회
			삶과 문화가 있는 맥주이야기	16명/4회
			쉽게 즐기는 작은 기타 우쿨렐레 교실	12명/4회
	굿모닝세미나		세상을 블렌딩한 커피이야기	14명/4회
			워킹샵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14명/8회
			에로스, 삶을 사랑하는 지혜	30명/9회
			임종진 사진수업 - 자신에게 사진을 건네다	18명/9회
	총 계			944명 참여



활동기구 교육 프로그램

민주주의, 평화, 복지, 경제를
시민운동에서 배운다

활동기구	프로그램명	참가자/강좌횟수
사법감시센터	국민참여재판 방청	7회
사회복지위원회	희망복지학교 강좌	25명/12회
	시민, 복지국가를 꿈꾸다 강좌	45명/6회

노동사회위원회	전태일 열사 40주기 기획 강좌, 답사	36명/2회
민생희망본부	부동산 뚝에 걸린 한국사회를 말한다 강좌	21명/5회
시민경제위원회	2010 시민경제 강좌	42명/12회
	2010 한국경제를 말하다	32회/6회
국제연대위원회 시민경제위원회	G20 톨아보기 강좌	28명/5회
국제연대위원회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강좌	26명/6회
	재난 속에 묻혀버린 아이티의 과거와 현재	15명
	아이티의 재난을 보는 우리의 시각 간담회	15명
평화군축센터	NPT란 무엇인가 특강	30명
	위험한 무기들을 감시하라 / 이시우	40명
	안보-군사주의에 대한 저항 / 이대훈	40명
	중동유혈 분쟁 이야기 / 김재명	40명
	천안함을 묻는다 / 이태호	40명
	원폭피해자 2세와의 대화	50명
참여사회연구소	〈한국의 정치학자들, 정의란 무엇인가를 따지다〉 포럼:대화	60명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저자와의 대화〉 포럼:대화	25명
	〈행복한 경제교육을 위한 다섯 가지 질문〉 교사직무연수	30명/6회
총 계		625명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중장기 계획

연도별 사업일정

2011		2012
중점①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	전세대란, 가계부채 등 민생사안의 종합적인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법개정운동 등 제도화 추진	총선, 대선에서 〈민생 종합과제〉 발표 정책 캠페인 진행
중점② 복지국가 만들기 캠페인	복지국가의 비전과 방안 제시, 시민주체 형성, 〈시민이 만드는 복지국가 캠페인〉 진행	복지국가 유권자운동 기구 구성, 정책과제 공약화 운동 전국적인 유권자 캠페인 진행
중점③ 한반도 평화 만들기 캠페인	한반도 평화체제 시민대안 제시, 국내외 평화연대 형성,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시민행동 진행	평화 공약 채택 운동, 〈평화를 위해 투표하자〉 캠페인 진행
중점④ 표현의 자유 캠페인	시민사회 공동의 선거법 개정안 입법 청원, 각계 지지선언 등 여론형성, 유권자 행동기구 구성 및 직접행동	선거표현의 자유를 위한 유권자 직접행동 참정권 증진을 위한 공약 채택 운동
중점⑤ 권력운동 종합평가 개혁대안제시	MB정부 권력운동 종합평가와 개선 방안 제시, 각 분야 주요정책 평가와 대안 제시, 종합 대안 보고서 〈한국사회 비전 보고서〉 발간	총선, 대선에서 각 분야 정책대안 제시 의제화 운동 진행
발전① 회원 15,000명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회원의 만족감, 참여, 기여를 높일 수 있는 연차별 회원 맞춤 프로그램 개발, 참여연대 사업특성별 회원가입 캠페인 진행, 회원행사 개선과 다양화, 〈카페통인〉과 옥상 정원 활용한 시민행사 개발	연차별 회원 맞춤 프로그램 평가 보완 참여연대 사업특성별 회원가입 캠페인 평가 보완
발전② 참여연대 운동 알기 쉽게 만들기	참여연대 기본 홍보물과 각 부서 홍보물 정비, 참여연대 활동자료와 DB자료실 구축, 참여연대 중점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체계 마련, 대외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참여연대 홈페이지 개편, 온, 오프라인 자료실 완비 참여연대 홍보물 완비
발전③ 지속가능한 참여연대 만들기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계획 마련, 회계 시스템 개선, 적극적으로 모금행사 진행, 건물 리모델링 기획	예측가능한 재정 운영 위해 사업별 예산제 도입 건물 리모델링 시작

한눈에 보는 2011년 월별 사업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민생살리기 캠페인	가계부채 위험성 보고서 발간 DIT규제완화 연장 저지 활동 시작		전세대란 해결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캠페인 시작		
복지국가 만들기 캠페인		참여연대 복지국가 입장문서 발간	복지국가 토론회 언론기획 설명 홍보물 제작	전국적인 연대운동망 구성 제안 전국과 부문 순회 설명회	시민이 만드는 복지국가 캠페인 시작
한반도 평화 만들기 캠페인		평화통일 활동가대회 천안함 1주기 기획 토론회	세계군축 행동의날 공동행동	평화체제 심포지엄, 소책자 발간	NLL 평화적 이용 위한 시민회의, 지역 평화 순례 시작
표현의 자유 캠페인		시민사회 공동의 선거법 개정안 마련	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선거법 개정 캠페인 시작	새로운 선거법안 발표대회 선거법 개정촉구 릴레이 선언 시작	
권력운용 종합평가 개혁대안 제시	MB정부 <인사정책 평가보고서> 발표	검찰백서 10월까지 MB정부 분야별 정책평가 및 평가보고서 발표		MB정부 <정보공개 및 기록물관리 평가보고서> 발표, <반부패 정책 평가보고서> 발표	공안권력 평가보고서 발표
회원 15,000명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활기차>와 <월간 참여사회> 활동보고 강화, 연차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시행	사업특성별 회원가입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참여연대 활동 알기 쉽게 만들기		참여연대 홍보물 순차적으로 정비 시작, 참여사회 1차 개편, 중점사업 보고 평가체계 마련		부서별 활동 홍보자료 발간	1차 참여연대 활동DB 자료실 구축 완료, 참여연대 홈페이지 개편 기획 시작
지속가능한 참여연대 만들기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백년지기 회원 재약정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회계 시스템 및 보고 양식 개선방안 확정	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기금 마련 후원회
시민참여 / 시민교육	1/4분기 자원활동가 모집	아카데미 느티나무 봄강좌 개강	회원 봄산행	2/4분기 자원활동가 모집	여름 인턴 모집

한눈에 보는 2011년 월별 사업일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민생살리기 캠페인			정기국회 민생 대안 입법 운동		국회 예산 심사 대응	
복지국가 만들기 캠페인			복지국가를 위한 릴레이 시민 선언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대행진		복지국가 단행본 발간
한반도 평화 만들기 캠페인	평화캠프		Pacific Freeze 국제워크숍,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전환 연대기구 발족	2차 평화군축박람회	2011시민평화백서 발간	
표현의 자유 캠페인			유권자 직접행동 기구 구성	유권자 직접행동 시작		〈시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및 정책대안 보고서〉 발표
권력운용 종합평가 개혁대안 제시		이명박 정부의 입법부 무시 실태 보고서		MB정부 〈견제와균형 평가보고서〉 발표	권력운용 평가대안 보고서, 평화백서, 복지국가 비전과 방안 보고서 발표	종합 대안 보고서 〈한국사회 비전보고서〉 발간
회원 15,000명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참여연대 활동 알기 쉽게 만들기					2차 참여연대 활동DB 자료실 구축 완료	
지속가능한 참여연대 만들기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창립기념 후원의 밤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정감시센터 〈의인기금〉 마련 후원회	
시민참여 / 시민교육	회원모니터단 정기설문, 아카데미 느티나무 여름강좌, 인턴 시작	교사직무연수 3/4분기 자원활동가 모집	아카데미 느티나무 가을강좌 개강	회원 대동제	4/4분기 자원활동가 모집	참여연대 송년회, 회원모니터단 정기설문, 아카데미 느티나무 겨울강좌, 겨울 인턴 모집

- 월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입회원한마당은 홀수 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7시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 열립니다.
- 회원모니터단 이슈별 설문조사는 부정기적으로 연 2회 진행됩니다.

1.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

● 사업배경

- 2009월 2월 이후 현재까지 서울·수도권 지역 전세가격 급등, 전세난 심화된 상황에서 전세대란 문제가 국민생활의 핵심이슈가 되고 있음. 그동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2011년 집중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 전개
- 2010년 연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380조원 대에 달하고, 현재 총 가계부채가 1천 조원을 육박하는 상황. 고물가 대책으로 금리 인상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대출금 상환 압박이 본격화될 때 가계파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 빚 권하고 폭리 취하는 구조,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가계부채로 인한 파산사태를 방지하고 연착륙 시키는 활동 필요
- 아이가 태어나 대학 졸업 때까지 무려 3억 원 안팎의 양육·교육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며, 그중에도 과도한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그밖에 통신비 부담과 물가급등이 중요 민생고가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

● 중기(2011-2012)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사안에 대한 종합적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 최근 심각한 민생문제로 대두된 전세대란, 가계부채 문제에 집중 캠페인
- 2012년 총선, 대선의 주요 '민생' 이슈, 과제 제시

● 단계별/연도별 과제

1단계(2011년)

- 전세대란, 가계부채, 기타 민생사안의 대안제시 및 제도화 추진
- 복지국가 전략이 민생을 앞세우는 비전이 되도록 적극적인 연계, 협력

2단계(2012년)

- 2012년 총선, 대선에 민생종합과제 발표 및 정책캠페인

● 2011년 주요과제 및 실행 방안

전세대란 대책 촉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대중캠페인 진행
- '전세대란, 무엇이 시급한가' 대토론회 기획 및 개최
- 언론사 공동기획 추진 : '전세대란 대책, 이것이 핵심이다'
- 장기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전세대란 해법을 꾸준히 제기하고 이슈화

가계부채 사태 악화 막기 위한 DTI 규제 완화 연장 저지

- 2010년 9월 시행된 DTI 완화가 가계에 미친 영향 보고서 발행
-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대책의 효과 분석 보고서 발행
-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한국의 가계부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등

악탈적 대출과 빚 권하고 이자 폭리 취하는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 신용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과장과잉 광고, 폭리, 무분별한 대출·대부 권유 문제제기
- 대부업체의 빚 권하기 식 잘못된 영업행위에 대한 제도적 규제 촉구
- 모든 이자폭리를 근절하는 캠페인 전개

과도한 교육비, 물가급등, 통신비 부담 등에 대한 대응

- 가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부담 줄이기 위해 고교 의무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의제화
- 고환율, 고물가, 저금리 정책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와 문제제기
-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촉구 활동 전개

2. 복지국가 만들기 캠페인

복지국가 비전 제시와 각계각층과의 연대 캠페인

● 사업배경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실패와 삶의 불안과 위기 증폭으로 국가(공공)의 책임 요구, 안정을 희구하는 경제사회 심리 형성
- 성장일변도 패러다임과는 다른 경제사회구조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
-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
- 복지정책의 나열과 조합을 넘어서 총체적인 국가운영전략과 시스템 전환의 의미로서 '복지국가 비전과 방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
- 2012년 권력재편기에 '보편적 복지' 논의를 국가비전 논의로 확장시키고,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시민주체를 형성하는 운동을 본격화하고자 함.

● 중기(2011-2012)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한국사회 총체적 국가운영 전략 전환의 의미로서의 복지국가 비전 제시
- '복지국가'의 상, 가치, 원칙, 중심 목표와 과제, 재원, 이행경로 관련 종합대안 마련
-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각계각층의 범국민운동 제안 및 주체 형성
- 복지국가 전략 추진을 위한 2012년 총선, 대선의 유권자운동 전개

● 단계별/연도별 과제

- 1단계 (2011년) : 복지국가 비전수립 및 주체형성
- 참여연대 복지국가 비전 제시(입장문서 만들기)와 공론화
- 복지국가 추진 시민주체 형성(대중운동 네트워크 구성)
- 핵심이슈 중심의 집중 캠페인

- 유권자운동의 기반형성
- 2단계 (2012년) : 복지국가 유권자운동 전면화
- 유권자 운동기구 구성
- 복지국가 정책과제 공약화, 정책캠페인
- 전국적인 유권자 캠페인 진행(복지를 위해 투표하자)
- 3단계 (2013년) : 복지국가 이행의 1단계 로드맵 제시
-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제안

● 2011년 주요과제와 실행방안

복지국가 비전의 수립 및 제안

- 복지국가의 원칙과 쟁점, 과제, 경로를 담은 기본 입장문서 발간
- 복지국가의 원칙과 이행의 쟁점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 복지국가 시리즈 팸플렛 발간 : 복지국가 핵심과제, 쟁점에 대한 설명, 홍보자료 cf. 5대 불안 해소(일자리, 노후, 의료, 교육, 주거) / 3대 쟁점 규명(경제와 복지, 복지재정, 보편주의)
- '복지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가칭) Q&A 제작
- 복지국가 비전과 방안 단행본 발간

복지국가구상 추진 시민주체 형성 및 전국적 연대운동망 구축

- 각계각층 이해당사자 집단, 정당, 대중조직, 지역부문조직 간담회, 설명회 개최
- 복지국가 릴레이 선언운동, 언론 광고운동 등 각계 참여와 지지 선언 조직
- 각계각층이 참여해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를 재확인하는 '복지국가 시민회의' 개최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당을 초월해 참여하는 정치권의 협력기구 구성
- 전국적인 복지국가 연대 운동망의 구성

'시민이 만드는 복지국가' 캠페인

- 복지국가 시민요구안('시민이 만드는 복지국가') 만들기, 릴레이 시민선언

운동

- '시민이 만드는 복지국가' 언론 공동캠페인 추진
-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및 대행진 개최

● 일정

- 3월 : 참여연대 복지국가 포지션 페이퍼 발간
- 4월 : 토론회 개최 및 언론공동기획 / 각종 기본문서 발간(Q&A/팜플렛)
- 5월 : 복지국가 연대운동망의 구성 제안 / 지역, 부문 순회 설명회 및 간담회
- 6-10월 : '시민이 만드는 복지국가' 1단계 캠페인
- 11-12월 : 단행본 발간 / '시민이 만드는 복지국가' 2단계 캠페인 (유권자운동)기획

3. 한반도 평화 만들기 캠페인

● 사업배경

-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이에 대해 북한의 봉괴와 흡수통일을 의도하는 자극적인 대북정책이 공표되는 등 남북관계 악화,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음.
- 한반도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것은 남과 북, 동북아시아에 군사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제거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범국민적 평화연대, 나아가 국경을 넘어서는 평화연대 형성이 절실
- 특히 현 정부가 추구하는 비현실적이고, 냉전적인 대북 압박 일변도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변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교류협력에 바탕을 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책대안과 범국민적 연대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함.

● 단계별/연도별 과제

기한	목표	활동방향
1단계(2010년)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본 입장 정리	· 평화체제 쟁점 연구 ·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와 비핵군축을 위한 정책모니터와 기획사업 추진
2단계(2011년)	평화연대의 형성	· 한반도 위기극복과 평화체제 형성을 향한 국내외 평화연대형성 · 시민평화방안 제시
3단계(2012년)	평화를 위한 시민 행동	· 평화 공약 채택 촉구 시민운동 〈평화를 위해 투표하자〉 운동

● 2011년 주요과제와 실행방안

한반도 평화체제 시민대안 제시

- 한반도 평화체제의 원칙과 실현방안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소책자 제작
- 2011시민평화백서 발간-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정책 종합평가와 시민대안
- 서해 NLL 인근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시민/주민회의 유치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축소(Pacific Freeze) 2차 국제워크숍과 국영문 보고서 제작

한반도와 동북아 군사긴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공격적인 군사훈련과 작전계획, 한일군사협력과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모니터링
- 대북정책 현안 모니터링 활동, 대국회 활동 전개
- 천안함 1주기 풀리지 않는 의문점 제기, 정부 후속대책에 대한 평가 진행
- 국방예산에 관한 집중 모니터링 활동

국내외 평화연대 강화, 시민주체 형성

-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형성, 남북화해 협력에 기초한 점진적 단계적 통일에 동의하는 각계각층과 정파를 초월한 연대의 토대 마련
- 각계각층을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의 다양한 쟁점을 토론하는 '시민평화회의', '평화통일 활동가대회' 공동기획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회 초청과 협력 확대와 협력기구의 형성
-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응하는 핵군축 국제시민회의 주체 형성

시민행동 “지금 평화를 이야기 하자”

- 제1차 국제 군축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 행사 개최
- 불요불급한 국방예산 삭감과 비인도적 무기 감축을 위한 2차 평화군축박람회 개최
- 평화학교/평화캠프/평화순례 개최
- '평화를 위해 투표하자' 유권자 캠페인 진행
- 기타 평화행동 기획 추진

● 일정

- 3월 : 평화통일 활동가대회 공동 개최
- 4월 :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 5월 : 평화체제 심포지움 개최, 소책자 발간
- 6월~ : 지역 평화순례, NLL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시민회의 개최
- 7월 : 평화캠프
- 9월 : Pacific Freeze 국제워크숍 개최, 국영문 보고서 제작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각계각층 초청파적 연대기구 발족
- 10월 : 2차 평화군축박람회 개최, 2012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위한 연대체 구성
- 11~12월 : 2011시민평화백서 발간, '평화를 위해 투표하자' 유권자 캠페인 기획 확정

4. 표현의 자유 캠페인

시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캠페인

● 사업배경

- 규제 중심의 선거법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상황
- 2007년 UCC, 2010년 트위터, 무상급식·4대강 캠페인 단속 등 단체·시민·네티즌을 망라한 온·오프라인의 규제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제약
- 독소조항을 개정·폐지하여 선거 시기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 나아가 규제를 최소화한 참여민주주의적인 선거법으로 전면 개정 필요

● 중기(2011-2012)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옥죄는 선거법 개정
- 시민의 자유권에 대한 적극적 옹호와 공익소송 시도
- 표현의 자유 및 유권자 선거 자유 신장

● 단계별/연도별 과제

- 1단계 (2011년) : 선거법 개정 시민 공동안 마련, 여론 형성
- 2단계 (2011년-2012년) : 선거법 개정을 위한 유권자 직접행동

● 2011년 주요과제와 실행방안

- 시민사회 선거법 개정 공동시안 확정, 공동 입법청원
-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연속 보고서 발간
- 선거에서 보장되어야 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목록 발표
- 참여민주주의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새로운 선거법안' 발표대회 개최
- 입법 청원 및 의원 네트워크 구축, 관련 언론 기획

범국민캠페인 주체 형성, 국회, 정부, 학계, 시민사회 지지그룹 형성

- 피해자, 네티즌 그룹, 유권자 단체, 정치학·법학자의 협력체계 구축
- 유권자 선거자유 입법화를 촉구하는 각계 릴레이 선언, 신문광고 운동 등 지지선언
- 선거 표현의 자유를 위한 각계각층 재능기부운동

유권자 1차 직접행동

- 표현의 자유 실현 입법을 위한 유권자 직접행동
- 1단계 정책 제시와 입법화 시도, 2단계 유권자 직접행동

● 일정

- 2월 : 선거법 개정운동팀 구성, 캠페인 기획
- 3월 : 선거법개정안 마련, 각계 각층과 협력체계 구축
- 4월-8월 : 1단계 정책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의제화
- 9월 : 유권자 행동기구 구성
- 10월 이후 : 2단계 유권자 직접행동

● ※ 기타 '표현의 자유' 운동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법에 대한 공익소송 제기

- 모욕죄, 기획재정부의 2011년 예산집행지침, 사회교과서수정지시, 업무방해죄, 공적 사안에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 위헌소송 제기

'표현의 자유' 정책 보고서

- 시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및 정책대안 보고서

'표현의 자유' 네티즌 캠페인

- 네티즌과 함께 하는 사찰반대 캠페인 <나도 사찰대상인가요?^{가책}> 진행
- 표현의 자유 찾기 매뉴얼 북 발간

● 일정

- 2월-4월 : 가계부채 위험성 보고서 발간, DIT규제완화 연장 저지 활동
전세대란 해결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캠페인 시작
- 9월~ : 정기국회 민생 대안 입법 운동, 정부 재정수립, 국회 예산심의
대응
- 12월 : 2012년 총선, 대선 민생 종합과제 발표, 유권자 캠페인 계획 수립

5. 정부권력운동 종합 평가와 한국사회 개혁대안 제시

● 사업배경

- 현 정부 권력운동이 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적
지적이 제기되어오고 있음
- 현 정부의 권력운동의 특징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견제와 균형,
참여민주주의의 원리에 기반한 대안적인 국가기구 개편방향, 인사 및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 제기
- 또한, 권력운동 외에도 현 정부의 각 분야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개선된 정책대안이 유권자들에게
선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 분야 정책 평가와 대안제시가 요구됨
- 이 과정을 통해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한국사회 개혁비전과 정책대안의
목록을 선거와 정부정책결정에 반영

● 중기(2011-12)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현 정부 권력운동 실태조사와 종합평가, 이를 개선할 참여민주국가
운영의 비전과 대안 제시
- 현 정부의 정책을 사회경제, 외교안보, 정치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집중
평가 분석하고, 참여연대가 추진하는 4대 캠페인의 성과들을 수렴하여
새로운 한국사회 발전의 비전과 정책대안을 마련
- 양대 선거와 새 국회(2012), 새 정부(2013) 구성을 거치면서 입법활동과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의제화

● 단계별/연도별 과제

1단계 (2011년)

- 현 정부 권력운동 실태 분석 평가 사업
- 현 정부 각 분야 정책 평가 사업
- 한국사회의 비전 보고서 발간

2단계 (2012년)

- 정책대안 제시와 양대 선거에서 각 정책대안을 의제화

3단계 (2013년)

- 새 국회와 새 정부에 정책대안과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관철

● 2011년 주요과제와 실행방안

이명박 정부 권력운동 실태 종합 평가 사업

- 상하반기 중 권력감시 활동 부서 중심으로 진행하고 하반기 종합보고서 발표
-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 평가 보고서(인사 DB구축)
- 이명박 정부 반부패정책 평가 보고서
-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기록물관리 평가 보고서
-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평가 보고서
- 이명박 정부 검,경,공안권력 평가 보고서
- 이명박 정부 견제와 균형 평가 보고서

정부 정책 종합평가

- 상하반기 중 현 정부 주요 정책 종합 평가(각 활동기구를 통해 민생복지노동 분야, 경제분야, 외교안보 분야, 정치행정분야 등) 진행

한국사회 비전 보고서 발간

- 하반기 중 권력운동 평가대안 보고서(민주주의 대안 보고서), 평화백서(한반도 평화 대안 보고서), 복지국가 비전과 방안 보고서(복지국가 대안 보고서), 이를 종합한 대안 보고서 〈한국사회 비전 보고서〉 발간

각 분야 정책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관련 기획 사업

- 현 정부 권력운동, 각분야 정책 분야별 평가 보고서와 토론회 개최
- 분야별 평가 보고서/ 한국사회 비전 보고서 발간 전후 언론기획 연재
- 이명박 정부 실정 및 최악의 인물 선정 온라인 캠페인

● 일정

- 3월-10월 : 분야별 정책 평가 사업 진행 및 보고서 발간
- 11월-12월 : 민주주의, 평화,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 평가보고서 및 종합 대안 보고서 〈한국사회 비전보고서〉 발간

1. 회원 15,000명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 사업배경

- 재정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참여연대를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회비수입의 증대 필수적
- 2006년 이후 회원증가는 매우 더딘 편,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신규 가입회원이 대폭 증가해 전체 회원수가 크게 늘었으나, 이는 우발적인 조건에 기인한 것임
- 참여연대는 연간 신규 가입회원 수가 적지 않지만 연간 탈퇴회원 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전체 회원수의 증가가 더딘 편임
- 탈퇴의 주요원인은 참여연대 활동과 운영에 대한 공유와 일상적인 참여와 교감의 부족
- 회원들이 참여연대 활동과 운영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의 적절한 제공, 의사소통 구조의 개선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기타 후원자로서 후원행위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계기들을 만들어 회원탈퇴를 줄이고 회원지속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대책 마련

● 중기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현재 10.4%인 연간 탈퇴 회원 비율을 7%대로 줄여, 2014년 회원 15,000명 시대 실현
- 주요 사업 전후 능동적인 회원참가 권유와 홍보활동을 통해 신규 가입회원 확대
- 회원들의 소속감과 이해와 기여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회원 프로그램 개발과 개선

● 단계별/연도별 과제

1단계 (2011년 상반기)

회원 연차별 맞춤형 참여 기여 프로그램 개발 및 단계적 시행

〈활기차〉와 〈월간 참여사회〉를 통한 활동, 운영상황 공개 확대
참여연대 사업특성별-계기별 회원가입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2단계 (2011년 하반기)

회원 연차별 맞춤형 참여 기여 프로그램 시행 평가 및 보완
활동, 운영상황 공개 확대 결과 평가 및 SNS 통한 소통 시도
사업특성별 회원가입 캠페인 시행

3단계 (2012 ~ 2013년)

회원 연차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속적 보완 및 시행
사업특성별 회원가입 캠페인 시행 평가 및 보완대책 시행

● 2011년 주요 과제

신입 회원, 연차별 회원 맞춤 프로그램 강화

- 신입회원이 빠르게 참여연대를 친근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및 회원으로서 만족감과 참여와 기여를 높일 수 있는 연차별 회원프로그램 방안
- 회원전용웹사이트 활기차, 월간 참여사회 등 참여연대 주요 매체를 통한 참여연대 활동, 운영상황 공개 강화 방안 시행

회원확대 계기 놓치지 않는 사업특성별 회원가입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참여연대 중점 사업 시행 및 시민의 관심집중이 예상되는 활동, 시민교육강좌 등을 통한 시민이 참여연대를 만나는 기회 등, 회원가입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상 상황별 회원가입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참여연대 모든 부서에 보급하고 시행촉진

참여층을 넓히고 참가자들의 만족감을 높이는 회원(시민)행사 개최

- 참가자 다양화, 만족감 향상 위해 각종 회원행사를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 참여연대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카페통인'과 옥상정원 활용한 회원 및 시민행사 개발

● 일정

- 2월 : 회원웹사이트 '활기차'와 〈월간 참여사회〉 통한 참여연대 활동운영상황 공개 강화방안 시행시작
- 3월 : 신입회원 및 연차별 회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신입회원 대상 프로그램 일부 시행, 연간 회원행사 기본계획 마련
- 4월 : 참여연대 사업특성별-계기별 회원가입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2. 참여연대 활동 알기 쉽게 만들기

● 사업배경

- 13개 센터/위원회, 2개 부설기관이 연간 천 여 개 이상의 콘텐츠를 생산하지만, 이 내용을 전략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취약한 상황
-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외의 요구
- 참여연대의 각종 활동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콘텐츠의 활용도를 배가시킬 기획 필요

● 중기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홍보물, 각 부서 활동 소개 홍보물 완비
- 참여연대 사이트, 뉴스레터, 참여사회 개편
- 참여연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음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 중점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보고로 목표 관리 안정화

● 단계별/연도별 과제

1단계 (2011년)

참여연대 기본 홍보물과 각 부서 홍보물 정비, 참여연대 활동자료와 DB 자료 온, 오프라인 자료실 구축, 참여연대 대외 평가 모니터링 체계 마련, 중점사업 평가체계 마련

2단계 (2012년)

참여연대 홈페이지 개편, 온, 오프라인 자료실 완비, 참여연대 홍보물 완비

● 2011년 주요 과제

참여연대 기본 홍보물, 각 부서 활동 소개 홍보물 정비

참여연대 활동자료와 DB자료에 대한 온, 오프라인 자료실 구축

참여연대 대외 평가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참여사회 개편

- 참여연대 활동 소개, 시민 일상생활과 연관된 생활문화 콘텐츠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3월부터 개편 진행

중점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체계 확립

- 분기별로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중점사업 추진경과와 평가 보고 안정화

● 일정

- 3월~ : 참여연대 홍보물 순차적으로 정비, 참여사회 개편, 온·오프라인 자료실 구축 시작,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보고 평가 체계 정비
- 6월 : 참여연대 홈페이지 개편 기획

3. 지속가능한 참여연대 만들기

● 사업배경

- 5년 동안 동결된 상근자 급여 인상, 사업비 확대에 의한 지출 요인 증가
- 안정적인 재정운영 위해 중장기 지출에 대한 예측 필요성 제기 (예산제 도입, 재정보고 시스템 개선 필요성)
- 참여연대가 참여와 연대, 문화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대내외적 요구

● 중기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상근자 급여 인상과 실질임금의 유지개선
- 참여연대 보금자리를 참여, 연대, 문화의 공간으로 재구성
- 중기재정계획 마련, 회계통합운영과 예산에 따른 지출 제도 관행 정착
- 재정사업 확대

● 단계별/연도별 과제

1단계 (2011년)

중기재정계획 마련, 상근자 급여 인상, 부서회계 통합 관리 시행, 건물 리모델링 기획

2단계 (2012년)

사업별 예산제 도입, 예산제와 보고시스템 안정화, 건물리모델링 시작

3단계 (2013년)

건물 리모델링 완성

● 2011년 주요 과제

상근자 급여 인상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대책 기획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제 도입

- 매 3년의 재정지출 요인을 분석하여 당해년 예산안 구성

- 회계통합 운영시스템 강화 위한 기초작업

- 재정사업의 적극성 강화

- 9월, 창립기념 후원의 밤 모금 행사 진행
- 상반기에 공익법센터 '표현의 자유 기금', 하반기에 행정감시센터 '의인 기금' 모금을 위한 지원
- 2~3월, 백년지기 회원 재약정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 사업 보고서, 감사 편지 발송, 재약정을 위한 행사 등

- 일정

- 3월 상근자 급여 인상
- 3월 회계 관련 내규와 지침 개정, 각 부서 회계보고를 위한 보고양식 마련
- 5월 백년지기 회원 재약정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 사업 보고서, 감사편지 발송, 재약정을 위한 행사 등
- 6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영 위해 전문가 자문단 구성
- 9월 창립기념 후원의 밤 모금 행사 진행
- 6~12월 행정감시센터 '의인 기금' 모금을 위한 지원
- 3,6,8,12월 재정지출 요인 분기별 재정운용 결과 보고
- 12월 당해년 재정운용 결과 종합보고 및 차기년 예산안 구성

“시민의 눈으로
감시합니다”



의정감시센터

● 중기 목표와 방향

-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평가 체계 정형화
- 국회의원 DB사이트 〈열려라국회〉 전문화, 대중화
- 의정감시센터 정기 모니터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 강화

● 2011년 주요 과제

1. 5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 캠페인 - 시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캠페인 진행
2.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
 -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진행될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에 적극 개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정치개혁특위 통해 시민사회의 단일한 입장을 정리하고,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 진행
3. 국회의원 의정 평가지수 개발
 - 정량평가(법안발의실적, 회의출석률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 결과를 분석한 의정평가 기획
 - 18대 국회 시범 평가 후, 2012년 19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
 - 결과는 〈열려라국회〉와 평가보고서 발표 통해 시민들과 공유

4. 18대 국회 평가

-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8대 국회와 주요 의원의 활동 평가 진행
- 5종 평가보고서 발표 : 1) 행정부의 입법부 무시 사례 보고서, 2) 절차를 무시한 여당의 국회 운영 보고서, 3)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치관계법 개정안 평가 보고서, 4) 17, 18대 비례대표 의원 활동 비교 보고서, 5) 18대 국회 표결 분석 및 의정 평가 보고서

5. 〈열려라국회〉 개편, 스마트폰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 국회의원과 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평가 보완 : 참여연대가 주목하는 법안 정보, 주요 표결 정보, 기억해야 할 의원, 18대 국회 일지, 국회 Q&A 등
- DB 관리툴 개선, 스마트폰 웹어플 개발
- 열려라국회 중장기 개편 기획 논의 시작
- 10월, 미디어 다음 서비스 제휴(법안발의, 투표결과 등 정보제공) 1주년을 맞아 평가와 개선 방안 모색

행정감시센터

● 중기 목표와 방향

- 정례적인 정부 평가사업 진행, 새 정부에 제안할 개혁과제 준비
- 반부패와 정부 투명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 '의인상' 위상 확대, 공익 제보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의인 기금 마련
- 경찰, 국정원 등 공안기구 감시 체계 마련
- 행정감시센터 정기 모니터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 강화

● 2011년 주요 과제

1. 반부패, 정부 투명성 확대 위한 2기 제도개혁 운동
2.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의인기금' 마련
 - 제2회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공익제보자 보호 기금 2011년 2,000만원 마련 목표
 - '의인상' 선정 기준과 대상, 과정을 정밀하게 설계하여 위상 제고
3. 공안기구 감시체계 마련, 민간사찰 사건 지속 대응
 -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사찰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응
 - 경찰의 권한남용, 과도한 치안정보수집, 기록물폐기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 : 사안에 따라 고발, 지침수정 혹은 폐기 운동 진행
 - 경찰 '인권교육 평가보고서 발표'
 - 국정원 권한 강화를 위한 5대 악법 저지 운동, 공안기구 권한 확대 시도 감시

4. 고위공직자 관공비 운영지침 제안

- 관공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외사례 연구, 기준마련 내부 토론회 진행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관공비 운영지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안
- 지역 주민들의 예산감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사법감시센터

● 중기 목표와 방향

- 검찰의 권한남용 감시, 시민들이 지지하는 검찰개혁안 마련 및 추진
- 대법관, 헌법재판관 교체 과정에서 시민 평가 체제 구축하고, 구성의 다양화 요구
- 법조윤리 강화 위한 모니터 체계 구축, 대안 마련
- 사법감시센터 정기 모니터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 강화

● 2011년 주요 과제

1. 검찰의 권한남용 개선 사업
 -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권 오·남용 사례 조사, 시리즈 기획보고서, 문제의 검사 명단 발표
 - 2008~2010년 이명박 정부 3년차 검찰보고서 발표, "그 사건 그 검사" DB사이트 오픈
 - 검찰개혁안 마련 위한 시민사회 모임 구성, 검찰 개혁 종합 보고서 기획
2. 검찰권 견제장치의 실질화, 시민참여 강화
 - 재정신청제도 운영 평가 보고서 발표
 - 재정신청 대상범위 확대 및 공소유지 담당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운동
 - 검찰시민위원회 1년 평가 : 시민위원 간담회, 일본 검찰심사회와 비교 평가하는 전문가 좌담회 개최

3. 대법관·헌법재판관 정보제공과 평가 사업, 인선 기준 제시 활동
 - 퇴임했거나 혹은 최근 임명된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판결 성향 평가보고서 발표 : 김희옥, 이공현, 송두환 헌법재판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양승태, 신영철, 차한성 대법관 등
 - 판결 성향 평가는 인선 기준에 참고하고, 연2회 전국 판·검사에게 배포하는 '사법감시'에 수록
 -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선기준 마련 위한 '공동모임' 구성
 - 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토론회, 언론기획, 시민캠페인 진행
4. 법조윤리 강화 위한 모니터 활동 강화
 - 연례 보고서 '법원장급 퇴임 변호사 사건수임내역 보고서' 발표
 - 로펌 취업 전관 실태 보고서 발표
 -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심리불속행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전관 수임실태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 법조윤리위원회 모니터
 - 검찰의 주요수사 사건에 대한 전관 변호사 선임 사례 조사

● 중기 목표와 방향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실체법에 대한 문제제기, 정책 방향 제시
- 공익소송의 영역을 시민권에서 사회권으로 확장
- 변호사 공익활동 지원, 공익변호사 발굴 (참여연대 상근변호사 채용)

● 2011년 주요 과제

1. 5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 캠페인> 진행
2. 시민적 기본권 옹호와 확장을 위한 공익소송 제기
 -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비정규직, 국민기초생활수급, 소비자권리 등 사회권 영역으로 시민적 기본권을 확장하여 공익소송 아이템 발굴
 - 시범적으로 2011년에는 사회권 분야의 공익소송 2건 제기
3. 공익 변호사 활동 지원
 - 공익활동을 지향하는 변호사들과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공익소송 약정 운동 추진
 - 상근 공익변호사 지원 위한 기금 모금
4. 공익소송을 위해 공익법제 청원
 - 공익소송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할 3종 공익법제 청원 :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익소송지원제도

“살맛나고 따뜻한
세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 중기 목표와 방향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노인빈곤 해소 위한 기초노령연금 인상 캠페인 진행
- 공보육 시설확대 및 아동수당 도입을 통한 보육부담 줄이기 운동 진행
- 복지담론 확산을 위한 교육, 출판사업 강화
- 일상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 2011년 주요 과제

1. 5대 중점 과제 중 하나인 <복지국가 만들기> 캠페인 진행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운동
 - 2010년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으로 빈곤 문제를 이슈화 한 것에 이어 본격적으로 410만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 개정운동 진행 : 부양의무자 조항 삭제, 최저생계비와 재산 기준 현실화
 -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연대기구를 확대하고, 국회 입법 로비, 출판, 언론 기획 등 공동 사업 추진
 - 기초법 개정을 지지하는 보건복지학자 선언 조직
 - 간주부양비 폐지 공익소송 진행
 - 관련 언론기획과 토론회 개최
3. 기초노령연금 인상 운동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상태인만큼 노인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가칭)기초노령연금 인상운동본부' 연대기구 구성

- 국회 연금개선특별위원회 모니터링 진행. 언론기획, 토론회, 기자회견 등으로 여론화
- 기초노령연금 확대 위한 2011년 전국노인대회 개최

4. 보육비 줄이기 운동

- '(가칭)복지국가와 돌봄 포럼' 구성하고, 복지국가와 돌봄에 대한 시민사회 단일안 마련
-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해 아동수당제도 도입법 제·개정운동 진행

5. 희망일꾼 만들기 '제4기 희망복지학교' 개설

- 대학생들에게 '권리로서의 복지',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 확장
- 새로운 복지환경과 정세에 맞게 기존 강의주제와 강사진을 재구성하고, 현장체험과 토론 프로그램 강화

6. 주요 현안에 대한 모니터

- 연금제도 : 연금금 재구조화 및 대안적 운용방안 마련
- 보건의료 :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 건강보험 대개혁 연석회의 활동
- 서비스 : 보육, 전달체계, 노인장기요양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 예산 : 2012년 재정전략회의 대응, 예산분석자료&요구안 등 브리핑 자료 발간
- 기타 : MB정부 평가사업, 보건복지 연합학술대회 공동주최 등

7. 출판사업의 강화

- 월간 『복지동향』의 안정적 발간
-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단행본 발간
- 그동안 한국에서 복지국가 건설이 어떤 이슈 중심으로 논의되었는지 담은 단행본 발간

노동사회위원회

● 중기 목표와 방향

- 빈곤, 실업, 산재 등 사회적 위험에서 미조직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정비
-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해결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일자리 대안 담론 마련, 정책방향 제시
- 위원회 일상 사업의 안정적 운영
- 노동사회위원회 회원확대, 재정 자립

● 2011년 주요 과제

1.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연대 활동

- 고용보험법 사각지대 사례 발표, 언론에 릴레이 기고, 1인 시위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 제기, 여론 환기
- 각 정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면담 등을 통해 국회 로비 진행

2. 청년 실업 대안 마련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위해 집중적인 로비활동 진행 (청년고용 대상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대기업, 의무고용비율 3%→5%, 권고→강제)
- 공공기관 청년신규채용 현황, 청년인턴제 등 정부의 일자리 대책, 국회 일자리 특위 모니터
- 청년실업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의 문제점 제기

- 공공기관의 간접고용노동자(민간위탁) 근로실태 보고서 발표
- (가칭) 지자체 외주·용역 관행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공공기관 민간위탁계약 시 최저가 낙찰제 금지 운동 (생활임금제 도입)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운동

- 국회의원,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산재법 개정안 마련 :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입증책임 완화 방향
- 언론기획과 토론회 개최 등으로 여론화
- 삼성 직업병(백혈병)에 대한 현안 대응

5.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인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

- 최저임금 실태, 최저임금 적정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각국의 최저임금 비교 리포트, 최저임금의 수준과 결정방식에 대한 토론회 개최
- 최저임금 결정시기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진행 : 인상 요구 담은 동영상 제작,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 인증,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 이용 운동 등

6. 현안과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

- 직업안정법 개악 저지
- 임시국회, 정기국회, 2012년 노동부 예산 및 일자리 예산 대응 등

민생희망본부

● 중기 목표와 방향

- 전세대란, 가계부채, 이자폭리, 물가문제와 같은 서민 생활과 국민 경제 이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민생 관련 공익소송 추진
- 등록금넷, 친환경무상급식폴뿌리국민연대,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재개발개혁포럼 등지속적으로 민생에 관한 연대 활동 진행

● 2011년 주요 과제

1. 부동산 정책, 뉴타운·재개발 개선 활동

- 정부에 제대로 된 전세난 대책 촉구 : 2, 4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위해 총력 대응, 수도권 주택임차인 모임, 세입자 대회 개최 등
- 재개발개혁포럼 '뉴타운 출구 전략' 연속토론회 개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 서울시 의회와 협력하여 공동 해법 모색

2. 등록금 1천만 시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 국회를 상대로 '반값 등록금, 등록금 상한제, 소득에 따른 차등책정제' 적극 입법로비, 학자금 대출 제도 전면 개선, 2학기에 폐지될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 부활 운동 진행
- 참여연대-등록금넷 공동기획 '미친 등록금의 나라' 단행본 출판 이벤트, 대학생 단체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 개최

3.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교육비리 추방을 위한 연대 활동 지속

-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국적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연대활동 진행

- 비리재단 복귀 반대, 교육부패 추방 위해 '교육비리 추방을 위한 공동 활동 기구' 참여
- 날치기로 전액 삭감된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예산' 복구 위해 추정 편성 운동 진행

4. 민생 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공익소송 제기

- 브론산업 과다함유 생수제품 정보공개청구소송, 연세대 상대 등록금·적립금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에 이어 정보통신 분야 소비자 집단 소송, 식품안전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등 진행

5. 중소상인 살리기 캠페인 지속

-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청원 등 법개정운동 진행
-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 과정에서 결성된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도입, SSM 규제의 실효성 강화, 지역 중소상인지원조례 제정,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중소상인사회안전망 도입 등 추진

6. 금융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 기획

- 1천조 가계부채, 과잉대출, 약탈적 대출, 이자폭리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리 찾기 운동 기획

7. 식품 안전 문제, 통신비 부담 완화 등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운동 기획, 대부업, 다단계, 도박 등 민생 침해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

시민경제위원회

● 중기 목표와 방향

-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제도화
- 정부의 금융정책 감시, 금융공공성 확보 운동 진행
- 정부의 경제정책 모니터와 대응

● 2011년 주요 과제

1.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정책 감시

- 분기별로 공정위 활동 감시 보고서 발표, 동반성장위원회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 모니터 보고서 발표
-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법제화 운동 진행
- 대기업의 구분별한 중소기업 사업 영역 진출에 사례 보고서 발표

2. 담합 사건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제도화

- LPG 담합 소송을 통해 소비자구제 방안 입법 추진,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실손의료보험 피해자 집단 소송 등 기획 소송을 위한 조사 작업 진행
-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사례 분석 보고서 발표

3. 자산유동화법 개악 저지 활동

-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실 공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하는 자산유동화법 개악 저지 위해 2·3월 이슈 파이팅, 여론화
- 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재정학자들과의 연대활동 추진, 의견서 발표, 공청회 개최 요구 등 국회 활동 진행

4. 정부 금융정책 감시 활동

-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은행권 구조조정 등에 대해 현안대응
- 중소기업 지원 및 미소금융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 개선 운동 진행
- 금융시민사회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와 연대해 금융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조세개혁센터

● 중기 목표와 방향

- 재정건전성 악화,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 철회 요구 지속
- 물가대책, 전세난 대책 등에서 남발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혜택에 대한 문제제기
- (가칭)재정조세개혁센터 발족 지원

● 2011년 주요 과제

1. 부자감세 철회 운동

- 법인세 높은 세율 구간 세분화를 위한 입법 운동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시행, R&D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이 상당한 수혜자가 되고 있는 세제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
-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철회 촉구 활동
- 물가대책, 전세난 대책에서 남발되고 있는 비과세 및 감면혜택에 대한 문제제기

2. (가칭)재정조세센터 발족 준비

- 전문가 인사 영입
- 예·결산 감시체계 구축



“평등화와 공정을 향해 고고~”

평화국제팀 | 치은하 손연우 김희순 박정혜 박정은 © 사진 정김신호

평화군축센터

● 중기 목표와 방향

-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행동 전개
- 동북아 비핵군축운동 활성화와 외연 확대
- 기여외교, 해외 군사개입활동 감시 지속

● 2011년 주요 과제

1. 5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 만들기> 캠페인 진행

2. 비핵군축운동 활성화, 2012 핵안보정상회의 한국 개최에 맞춰 대응 준비

-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군사행동 중단 촉구 평화행동 진행
- 세계군축행동의 날(4/12) 평화군축캠페인 진행
- 10월 방위산업박람회 즈음하여 대안적인 평화군축박람회 개최
- 아태지역 군비축소(Pacific Freeze) 국제 워크숍과 전략 회의 개최
- 2011 핵군축보고서 발간, 핵군축 국제시민회의 조직과 동북아비핵지대화 공론화

3. 천안함 침몰 1주기 사업 기획

-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과 쟁점별 종합보고서 발표
- 천안함 1주기 국회 공동 토론회, 언론 기획
- 2010년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진행 관련 법적대응 모색

4. 해외 파병부대 활동 모니터링

- 아프가니스탄 오쉬노 부대 활동, 소말리아 청해부대 대테러 활동 모니터링

- UAE 원전 수주 의혹 규명 및 파병부대 활동 모니터링
- 원조효과성에 관한 4차 고위급회의(HLF-4)에서 군사적 목적의 공적개발원조(ODA) 문제 공론화
- 연말 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5. 대북정책과 국방정책 모니터링, 의견제시

- 통일세 입법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대응, 남북군사회담 포함 남북대화 촉구 활동
- 국방예산, 합동훈련, 연합훈련,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MD(missile defense,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모니터링

6. '시민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2011 평화백서 제작

- 평화체제의 기본원칙과 경로, 쟁점, 남북당국과 시민사회에 대한 제언 등을 담은 단행본 발간

7. 이명박 정부 외교, 통일, 국방 정책 평가 보고서 발간

8. 국제 평화연대

- GPPAC 국제운영단 방북 조직과 정책문서 제작,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한일 시민평화운동' 연대활동 진행

국제연대위원회

● 중기 목표와 방향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감시 역량 강화,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마련, 고위급회담(HLF-4, 2011) 대응
- 아시아 권력감시 네트워크 구축, 한국정부 외교감시를 통한 아시아 연대 강화
- 아시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세계시민의식 증진 위한 대중사업 강화
-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유엔과의 협력활동 강화

● 2011년 주요 과제

1.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감시와 제언 활동
 - 한국 ODA 정책 분석 보고서 발간
 - 아시아 국가별 현장 조사, 평가방법론 연구 위한 전문가-단체 간담회 개최
 - 인권, 평화, 민주주의, 원조효과성 관점에서 ODA 대중강좌 개최
 -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HLF-4)에 적극 의견 개진, 국제개발협력한국시민사회포럼(KoFID)을 통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2. 아시아 권력감시 네트워크 구축, 한국정부 외교감시를 통한 아시아 연대 강화
 - 아시아 권력 감시 네트워크 구축
 - 5월, 아시아 민주주의 실태와 과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SDMA
 - 아시아 사법감시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낙천낙선운동, 사법감시운동) 소개 영문책자 제작

이명박 정부 기여외교(파병, ODA), 신아시아 외교 등

외교 감시 활동 진행

- 한국 정부의 아시아 국가(태국, 버마) UPR 심사 모니터 보고서 발간
- 아프간 지역재건팀(PRT) 등 군을 통한 취약국가에 지원되는 ODA에 관한 보고서 발간

3. 아시아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대중사업 진행

- 5월, 아시아 민주주의 강좌, 하반기 아시아 시민사회운동 강좌 개설
- 전문가 칼럼 연재
- 국내에 체류 중인 아시아 활동가들과 교류 프로그램 기획(Asia regional school, MAINS, 5.18 아시아학교 활용)

4.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 관련 유엔과의 협력활동 지속

- 유엔 인권규약 관련 국가보고서 대응
- 유엔인권이사회 회기 즈음한 서면성명서(written statement, 사례별 fact sheet) 제출
- 6월, 유엔 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보고서 발표에 따른 후속 활동 진행 등

아카데미 느티나무

● 중기 목표와 방향

- 강좌 기획의 방향 정립과 안정화
- 새로운 세대와 대상으로 시민교육 확대
-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 참여연대 시민교육 역량 강화

● 2011년 주요 과제

1. 참여연대형 민주주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민주주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조사, 가을 강좌에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2.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각 센터가 주관하는 시민교육에 대한 컨설팅, 공동평가
 - 강좌기획·진행 등에 대한 세부 매뉴얼 마련, 간사 교육 추진
3. 예비 대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작
4. 홈페이지 보완, 수강생 관리방안 정비, 동영상 강의 확대 등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사진 정김신호

“앞의 즐거움, 모든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 | 주은경 정세윤 김민수

참여사회연구소

● 중기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의 복지국가의 이론적 토대 마련

● 2011년 주요 과제

1. '복지국가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토론회, 강연, 연구 세미나' 개최
 - 복지국가 캠페인, 한반도 평화 만들기 캠페인 각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복지국가의 이론적 토대와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2.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출간
3.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 다양화
 - 사법감시센터, 의정감시센터 활동 내용 중심의 사회교과 직무연수안 마련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시민참여팀 | 이진선 박근용 박효주 ©사진 정김신호

시민참여팀

● 중기 목표와 방향

- 재정수요, 지속가능성 고려하여 회원모집 목표 설정, 참여연대 주요 사업(캠페인)을 회원확대의 계기로 활용하여 목표치 달성
- 회원서비스와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만족감을 높이고, 회원 탈퇴율 줄이기
- 후원기간, 거주 지역, 관심사 등 다양한 회원층에 맞춘 회원행사 기획,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회원참여 캠페인 개발
- 자원활동가의 자긍심과 유대감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 자원활동 모집, 관리의 효율성 강화

● 2011년 주요 과제

1. 참여연대 주요 캠페인과 회원확대 연계 방안 개발
2. 신입회원과 연차별 회원 대상 정보제공 등 회원프로그램 강화
3. 참여층을 확대하고, 참가자들의 만족감을 높이는 회원(시민)행사 기획
 - 대규모 연례 행사, 소규모 회원행사를 참신하고 다양하게 개선
 - '카페통인'과 옥상정원을 활용한 회원, 시민행사 개발
4. 상반기에 반연간 회원캠페인 주제와 방법 개발, 지원체계 마련
5. 자원활동가 모집, 업무배치, 관리 개선 방안 개발
 - 활동내역 데이터베이스 개발, 자원활동가 자긍심,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 운영
6. 4년간 7회에 걸쳐 시행한 대학생 인턴 사업 평가, 개선안 검토



정책기획팀

● 중기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와 각 부서 활동소개 홍보물 정비
- 참여연대 홈페이지, 뉴스레터, 참여사회 등 회원들과 소통하는 매체 개편
- 중점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보고로 목표 관리 안정화
- 참여연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 마련
- 한국사회 비전을 연구하는 TF구성, 국가 운영 전략과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진행

● 2011년 주요 과제

1. 참여연대와 각 부서 활동 홍보물 정비 : 온라인, 인쇄물, 영상자료
2. 참여연대가 생산하는 각종 활동 자료, DB 관리체계 마련, 온, 오프 자료실 구축
3. 참여연대 홈페이지, 뉴스레터, 참여사회 등 매체 개편 시작
4. 분기별로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중점사업 추진경과와 평가 보고 안정화
5. 총회 준비, 회원모니터단 운영 안정화를 위한 매뉴얼 정비
6. 한국사회 미래 비전 등에 대한 정책연구 활동 진행



운영팀 | 안진경 김현정 전보임 송윤정 ©사진 정김신호

운영팀

● 중기 목표와 방향

- 상근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인상, 역량 강화
- 예산제 도입하여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예측가능성 높이기
- 재정,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선과 관계맺기 프로그램 안정화
- 참여연대 건물과 공간의 쓰임새 개선

● 2011년 주요 과제

1. 재정 수입과 지출의 예측가능성 높이기, 안정적 재정 확보 계획 마련과 실행
2. 재정,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선. 관계맺기 프로그램 안정화
3. 상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진행과 지원
4. 활동 지원 업무 안정화를 위한 내규(지침, 매뉴얼) 재정비
5. 건물과 공간의 쓰임새 개선

2011 주요 연대 과제

- 보편적 복지를 위한 연대
- 서민경제 개선을 위한 연대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대
- 한반도 평화와 비핵군축을 위한 연대
-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연대
-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연대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연대
- 아시아 민주화와 권력감시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연대
- 국제빈곤퇴치와 개발원조정책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

2010 회계감사 및 결산보고
2011 예산안

살림살이

2010년 회계감사 보고

- 회계감사보고 : 윤형근 (회계사)
- 회계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제17기)

● 총평

2010년(제17기) 회계연도 참여연대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전기(제16기) 대비 수입은 2억1천4백만원(13.3%) 증가하였고 지출은 2억2백만원(14%) 증가하였다. 기타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과 이자비용 지출은 큰 변동이 없어서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1천만원 증가하였다.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억3천7백만원이나 지출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급여 7천6백만원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충당금(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상 현금, 예금 및 기금을 포함한 당좌자산은 7억7백만원으로 전기 대비 1억8천만원 증가하였다. 15기에 큰 폭으로 감소한 정기 후원금 수입은 당기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2008년 이후 지속되는 정치적 상황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전기에 총 수입의 66%였던 회비수입이 당기에 큰 폭으로 증가(1억9천3백만원, 총 수입의 69%)한 것은 역동적인 정치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참여연대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신호로 판단된다.

복식부기에 의한 월별 회계는 외주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부문별 평가

1. 수입 부문

회비수입은 약 12억6천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 증가하였다. 기타 정기후원금 수입, 부정기후원금 수입, 사업수입은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 지출 부문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지출은 전년도 대비 2억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역시 참여연대의 적극적인 참여 활동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크게 증가(7천2백만원, 30.7%)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며 인건비(5천2백만원, 5.7%)는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59%)이라 증가율은 높지 않으나 총지출의 주요한 상승요인이라 하겠다. 그 외 대부분 항목의 지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퇴직급여는 2010년 말 현재 참여연대 전원의 퇴직금 추계액을 전기 계상분에 추가 계상한 것이며 이는 대차대조표 부채 계정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3. 회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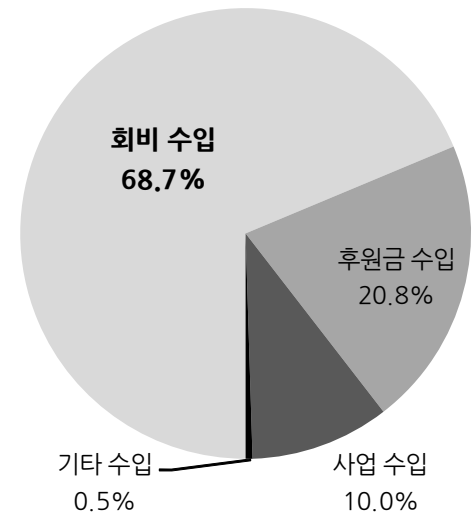
2010 회계연도 회계처리는 외주방식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2010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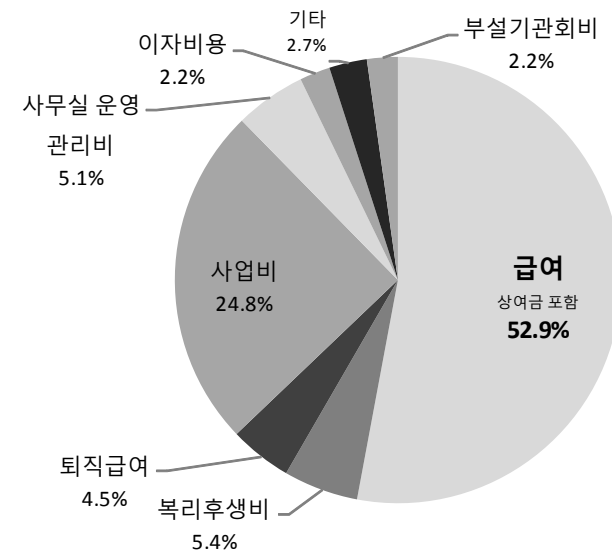
수입	단위 : 원	비율
회비 수입	1,255,424,780	68.7%
후원금 수입	380,572,660	20.8%
사업 수입	182,570,206	10.0%
기타 수입	8,984,940	0.5%
총계	1,827,552,586	100.0%

지출	단위 : 원	비율
급여 (상여금 포함)	895,215,059	52.9%
복리후생비	91,418,444	5.4%
퇴직급여	76,468,993	4.5%
사업비	419,302,817	24.8%
사무실 운영 관리비	86,903,173	5.1%
이자비용	37,400,227	2.2%
기타	46,434,334	2.7%
부설기관회비	37,706,000	2.2%
총계	1,690,849,047	100.0%

수입



지출



대차대조표

제17기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16기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참여연대 전체 [부설기관제외] (단위:원)

과 목	제 17(당) 기 금 액	제 16 (당) 기 금 액
자 산		
Ⅰ. 유동자산	707,281,313	527,383,324
(1) 당좌자산	707,281,313	527,383,324
1. 현금	1,816,882	1,622,572
2. 보통예금	647,716,218	485,840,124
3. 상근자교육기금	14,671,551	25,368,410
4. 연대기금	2,544,877	2,842,298
5. 퇴직기금	-	-
6. 도시락기금	521,081	2,000,413
7. 참여사회기금	10,704	9,709,507
정기예적금	40,000,000	
단기대여금	-	
Ⅱ. 비유동자산	4,228,033,526	4,228,033,526
(1) 투자자산	177,810,266	177,810,266
1. 장기대여금	177,810,266	177,810,266
(2) 유형자산	4,050,223,260	4,050,223,260
1. 토지	2,634,664,824	2,634,664,824
2. 건물	1,415,558,436	1,415,558,436
(3) 무형자산	-	-
(4) 기타 비유동 자산	-	-
자산총계	4,935,314,839	4,755,416,850

부 채		
Ⅰ. 유동부채	23,931,863	21,296,877
미지급금	70,000	
1. 예수금	22,144,336	17,216,909
2. 부가세예수금	1,717,527	4,079,968
단기차입금	-	
가수금	-	
Ⅱ. 비유동부채	855,742,822	757,495,622
1. 장기차입금	650,000,000	650,000,000
2. 퇴직급여충당금	195,742,822	67,495,622
3. 장기임대보증금	10,000,000	40,000,000
부채총계	876,674,685	778,792,499
자 본		
Ⅰ. 자본금	4,055,640,154	3,976,624,351
1. 자본금	-	3,976,624,351
2. 출연금	-	-
3. 보금자리출연금	-	-
4. 임의적립금	-	-
자본총계	4,055,640,154	3,976,624,351
부채와자본총계	4,935,314,839	4,755,416,850

손익계산서

제17기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16기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참여연대 전체 [부설기관제외] (단위:원)

과 목	제 17 (당) 기 금 액	제 16 (당) 기 금 액
수입총액	1,827,552,586	1,612,450,990
회비수입	1,255,424,780	1,062,803,684
정기후원금수입	6,000,000	6,079,000
부정기후원금수입	374,572,660	334,377,378
사업수입	182,570,206	201,608,294
이자수익	801,324	1,130,512
잡이익	8,183,616	6,452,122
지출총액	1,690,849,047	1,485,491,113
급여	783,936,196	753,974,799
상여	111,278,863	98,028,147
잡급	-	-
퇴직급여	76,468,993	67,495,622
복리후생비	91,418,444	88,963,683
여비교통비	7,902,150	655,990
통신비	33,475,010	29,687,940
수도광열비	1,643,500	1,869,080
전력비	20,243,990	17,353,120
세금과공과금	18,970,134	15,308,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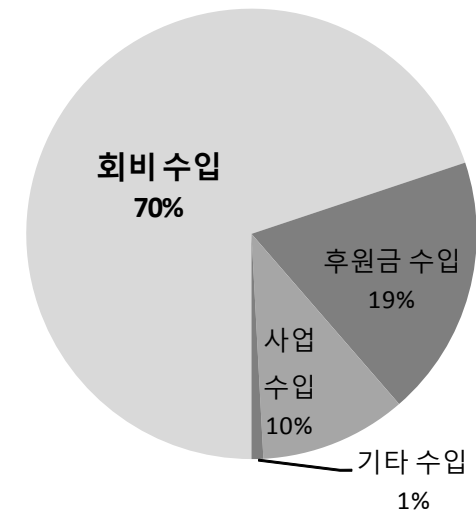
임차료	7,484,310	6,664,429
수선비	9,989,509	7,031,020
보험료	5,109,914	1,480,120
차량유지비	2,525,500	1,437,200
교육훈련비	8,869,624	12,999,750
도서인쇄비	5,426,020	6,021,930
회의비	16,796,110	6,025,663
사무용품비	5,455,460	3,981,530
소모품비	25,807,060	6,903,790
지급수수료	46,783,912	29,921,775
보관료	-	-
광고선전비	4,070,000	510,000
건물관리비	2,768,440	990,000
잡비	7,386,134	5,756,800
사업비	307,699,027	235,435,152
발송비	6,448,840	13,132,952
부설기관회비등	37,706,000	31,556,000
이자비용	37,400,227	36,134,738
기부금	6,350,000	5,990,000
잡손실	1,435,680	181,563
손익	136,703,539	126,959,877

2011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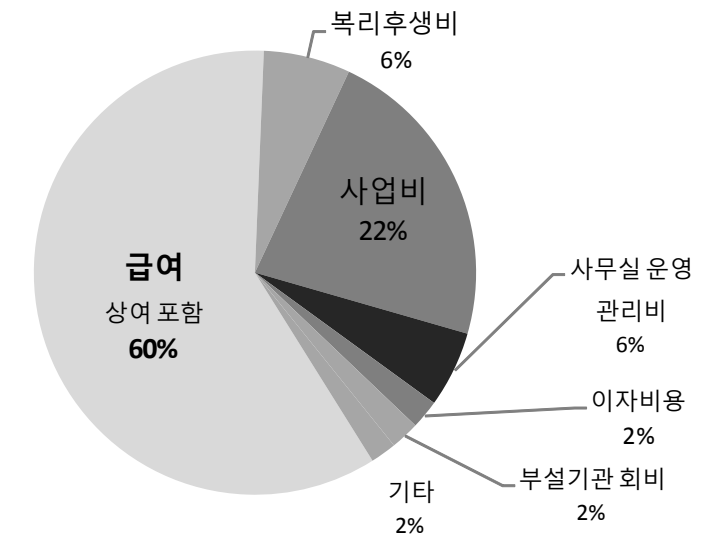
수입	단위 : 원	비율
회비 수입	1,326,344,024	69.9%
후원금 수입	356,000,000	18.8%
사업 수입	200,000,000	10.5%
기타 수입	15,937,980	0.8%
총계	1,898,282,004	100.0%

지출	단위 : 원	비율
급여 (상여 포함)	1,130,000,000	59.5%
복리후생비	120,000,000	6.3%
사업비	427,000,000	22.5%
사무실 운영	105,500,000	5.6%
관리비	40,000,000	2.1%
이자비용	39,782,004	2.1%
부설기관 회비	36,000,000	1.9%
기타		
총합계	1,898,282,004	100.0%

수입



지출



2011 예산(안)

제18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참여연대 전체 [부설기관제외] (단위:원)

과 목	제 18 (당) 기 금 액
총수입	1,898,282,004
회비수입	1,326,344,024
정기후원금수입	6,000,000
부정기후원금수입	350,000,000
사업수입	200,000,000
이자비용	8,000,000
잡이익	7,937,980
총지출	1,898,282,004
급여	1,250,000,000
여비교통비	10,000,000
통신비	35,000,000
수도광열비	2,000,000
전력비	23,000,000
세금과공과금	20,000,000
임차료	7,500,000

수선비	13,000,000
보험료	13,000,000
차량유지비	3,000,000
교육훈련비	10,000,000
도서인쇄비	6,000,000
회의비	18,000,000
사무용품비	5,000,000
소모품비	15,000,000
지급수수료	30,000,000
건물관리비	5,000,000
잡비	8,000,000
사업비	330,000,000
발송비	7,000,000
부설기관회비등	39,782,004
이자비용	40,000,000
기부금	6,500,000
잡손실	1,500,000
손익	-

정관 개정정안

참여연대 정관

1994. 9. 10. (제정)
1995. 3. 23. (01차 개정)
1996. 3. 13. (02차 개정)
1997. 9. 10. (03차 개정)
1998. 9. 27. (04차 개정)
1999. 2. 6. (05차 개정)
2000. 2. 19. (06차 개정)
2001. 2. 10. (07차 개정)
2002. 2. 23. (08차 개정)
2003. 3. 15. (09차 개정)
2005. 3. 12. (10차 개정)
2006. 2. 25. (11차 개정)
2006. 9. 13. (12차 개정)
2007. 3. 3. (13차 개정)
2011. 3. 5. (14차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참여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2.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5.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6.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제5조 [소재] 참여연대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가입]

- ① 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 ②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참여연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임협의회]

- ① 참여연대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참여연대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제 3 장 기 구

· 제1절 총회

제11조 [지위] 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2조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 ①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고문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5조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16조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정책위원장단과 선출직 집행위원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정하는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활동기구의 임원을 임명한다.

·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21조 [구성]

-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2조 [임기]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

- ①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 ②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 ④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제4절 공동대표, 고문, 감사

제24조 [공동대표]

- ①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고문]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 제5절 정책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제27조 [정책위원회]

- ①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과 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실행위원과 산하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제28조 [정책자문위원회]

- ① 참여연대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9조 [활동기구]

- ① 참여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각 활동기구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처]

- ①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1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협동사무처장]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고,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처장과 같다.

· 제6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33조 [지역조직]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4조 [부설기관]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 4 장 재 정

제35조 [회계 연도] 참여연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예산과 결산]

-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 ③ 집행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37조 [수입] 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 제 5 장 해 산

제38조 [해산 사유] 참여연대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9조 [해산 절차]

-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0조 [잔여 재산의 귀속] 참여연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참여연대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 제 6 장 보 칙

제41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 ①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 ② 주요 임원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42조 [준용 규정]

-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 ② 내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년 3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6년 3월 1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7년 9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년 9월 2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6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년 2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년 2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년 3월 1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12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9월 13일 임시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정관 개정 전후 조문 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제15조〔구성〕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u>집행위원회</u>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u>정책위원장</u>,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u>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u>	제15조〔구성〕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u>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u>
제36조(예산과 결산)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u>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신설〉	제36조(예산과 결산)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u>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u> ③ <u>집행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u>
제40조(잔여 재산의 귀속) 참여연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참여연대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시킨다.	제40조(잔여 재산의 귀속) 참여연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참여연대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u>비영리</u>단체에 귀속시킨다.

2011 임원인선안

함께 일하는 사람들



2011 임원인선안

※ 굵은 글씨 : 신임 인원

● 공동대표

이석태(변호사) 임종대(한신대 교수)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청화(청암사 주지스님)**

● 감사

윤형근(회계사)

● 고문

김중배(언론인) 김창국(변호사) 명진(스님) 박상중(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안경환(서울대 교수)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오재식(전 월드비전 회장) 이삼열(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선종(원불교 중앙훈련원 원장) 임현영(민족문제연구소장) 장임원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주종환(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최영도(변호사) 홍성우(변호사)

● 운영위원회

- 위원장 : **한상희(건국대 교수, 전 사법감시센터 소장)**
- 부위원장 : **김남근(변호사, 전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진영종(성공회대 교수)
- 당연직 운영위원 : **이석태(공동대표)** 임종대(공동대표) 정현백

(공동대표) **청화(공동대표)** **한상희(운영위원장)** 진영종 (운영위 부위원장) **김남근(운영위 부위원장)** 김진욱(집행위원장) 홍성태
(집행위 부위원장) 차병직(정책자문위원장) **김민영(정책위원장)**
이태호(사무처장) 박원석(협동사무처장) **이승희(협동사무처장)**
김영정(회원모임 '산사랑' 대표) 오세은 (회원모임 '참 좋다' 대표)
박지영(회원모임 '청년마을' 대표)

- 선출직 운영위원 : 김봉수(자영업, 부산경남회원모임 회장) 김상균
(방송인) 김성희(직장인) 김영수(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 맹행일
(자원활동가) 박상철(직장인) 방정균(상지대 교수) 변희욱(의사)
석락희(직장인) 성승택(직장인) 손성태(직장인) 안정희(자영업) 오세중
(변리사) 윤형준(직장인) 이경휴(주부, 수필가) 이상미(장안대 교수)
이상윤(의사) 이선노(사업가) 이옥수(자영업) 이적(목사) 이찬진
(변호사) 이해숙(주부, 수필가) 이해영(한신대 교수) 이희영(대구대
교수) 장연희(자원활동가) 장정아(자원활동가) 정광교(음악가) 조룡상
(직장인) 주진오(상명대 교수) 지관(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채명묵
(자원활동가) 최현(제주대 교수) 하승수(변호사) 하원상(직장인)
한명희(자영업) **한귀영(여론조사전문가)** 한승호(치과의사) 허성희
(직장인) 허필두(직장인) 홍석인(직장인) 홍천희(자원활동가)
- 선출직 운영위원 중 추천 운영위원 :
강명주(자원활동가) **김민아(직장인)** **김지현(주부)** **김홍식(재테크
강사)** **맹기호(자영업)** **박현숙(직장인)** **손승일(법무사)** **심영준(직장인)**
안규혁(주택관리사) **엄은희(교수)** **오윤석(농업)** **오종철(직장인)**
윤미자(임상심리사) **이용운(직장인)** **이유리(대학생)** **이은정(직장인)**
임상웅(자영업) **정구현(직장인)** **정주호(직장인)** **조송미(약사)**

●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장 : 김진욱 (변호사)
- 부위원장 : 홍성태 (상지대 교수)
- 당연직 집행위원 : **이석태(공동대표)** 임종대(공동대표) 정현백(공동대표) 청화(공동대표) **한상희(운영위원장)** 진영중 (운영위 부위원장, 시민위원회 위원장, 아카데미 느티나무 운영위원장)
김남근(운영위 부위원장) 김진욱(집행위원장) 홍성태(집행위 부위원장) 차병직(정책자문위원장) **김민영(정책위원장)** **이태호(사무처장,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박원석(협동사무처장) **이승희(협동사무처장)** 손성태(회원모임협의회 대표) 경건(행정감시센터 소장) **김창준(행정감시센터 공익제보지원단장)** 박경신(공익법센터 소장) **신진욱(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센터 소장)** **이광수(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사업단장)** **이남주(평화군축센터 소장)** **이태수(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현욱(민생희망본부장)** **임상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성대(의정감시센터 소장) **조형수(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조홍식(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주은경(아카데미 느티나무 운영위 부위원장)** 최영태(조세개혁센터 소장) 하태훈(사법감시센터 소장)
- 선출직 집행위원 : **김기식(전 정책위원장)** 김정인(춘천교육대 교수) **박영선(전 기획위원장)** **박주민(변호사)** 윤홍식(인하대 교수)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정책자문위원회

- 위원장 : 차병직(변호사)
- 부위원장 :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 정책자문위원 : **강원택(서울대 교수)**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권진관(성공회대 교수)** 김균(고려대 교수)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김상조(한성대 교수)** 김수진(이화여대 교수) 김연명(중앙대 교수) 김중해(가톨릭대 교수) 김진방(인하대 교수) 김호기(연세대 교수) **김환석(국민대 교수)** **남상철(변호사)** 박진도(충남대 교수)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호성(서강대 교수) 백종만(전북대 교수) **손혁상(경희대 교수)** **손혁재(경기대 교수)** **신광식(약사)** **안영도(변호사)** **유팔무(한림대 교수)** 윤상철(한신대 교수) 이대훈(성공회대 겸임교수) **이병훈(중앙대 교수)** **이은영(외국어대 교수)** **임정근(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장유식(변호사)** 장하성(고려대 교수) 조국(서울대 교수) 한인섭(서울대 교수)

● 정책위원회

위원장 : 김민영

● 사무처

사무처장 : **이태호**

협동사무처장 : 박원석 **이승희**

부록

회원 설문조사 결과

회원모니터단 1차 설문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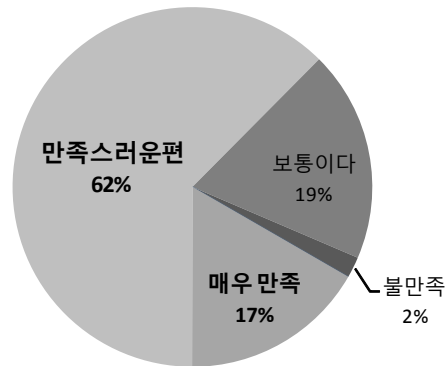
참여연대는 올해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회원님들의 평가와 의견을 보다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2011년 2월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이메일 회원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500여 명의 회원모니터단 회원님들 중에 311명(응답률 62.4%)이 참여해 주셨고, 조사결과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도움을 받아 분석하였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전해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참여연대가 각종 활동을 고민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ART I. 2010년 활동 평가

- 2010년 참여연대 활동, 79.1%, '만족한다'
- 5대 방향 실천평가, '회원(시민)참여 사업' 5점 만점에 3.61점
- 가장 잘한 활동, '공익제보자의 밤', 양심의 호루라기상 제정'

회원모니터단은 2010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만족이 79.1%
매우 만족 16.7% + 만족스러운
편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 19.0%, 불만족 1.9%
매우 불만족 0.0% + 불만족스러운 편 1.9%로 대다수가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0년 참여연대 5대 활동 방향의 실현 정도에 대해서는 '회원확대,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 확충, 회원모니터단 구성회원 의사결정 참여구조 개선'(3.61점) > '권력기관의 전횡, 불법·탈법에 대한 밀착감시, 시민기본권 옹호'(3.46점) > '지방선거 정책참여, 민주주의 균형회복, 정부여당 독주심판'(3.37점) > '한반도 동북아 핵위협과 군사적 긴장 제거, 파병반대'(3.35점) > '일자리, 복지, 주거 영역에서 민생 대안 제시, 시민생활 개선'(3.16점)의 순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회원확대,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 확충, 회원모니터단 구성회원 의사결정 참여구조 개선 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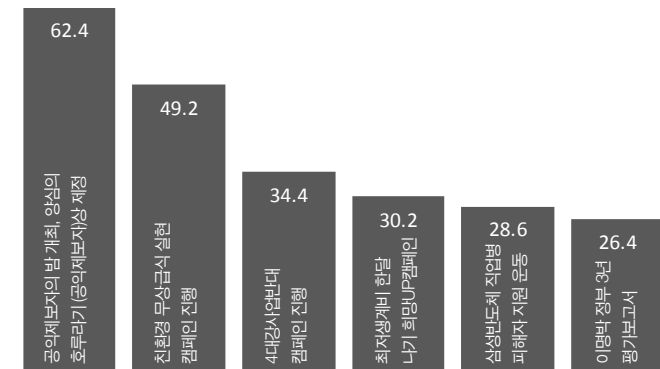
권력기관의 전횡, 불법·탈법에 대한 밀착감시, 시민기본권 옹호 55

지방선거 정책참여, 민주주의 균형회복, 정부여당 독주심판 45.3

한반도 동북아 핵위협과 군사적 긴장 제거, 파병반대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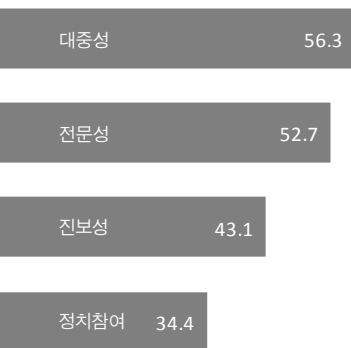
일자리, 복지, 주거 영역에서 민생 대안 제시, 시민생활 개선 35.7

2010년 참여연대의 대표적인 활동 32개 중 가장 잘 한 활동으로 꼽힌 것은 '공익제보자의 밤, 양심의 호루라기상 제정(62.4%)'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캠페인' 49.2%, '여주 이포보 응원방문, 인간띠잇기 등 4대강사업반대 캠페인' 34.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운동,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30.2%,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지원 운동 및 실태보고서 발간' 28.6%, '이명박 정부의 3년 평가보고서(인사, 정책 분석) 발표' 26.4% 등의 순으로 꼽아주셨습니다.



PART II. 2011년 활동 방향

- 참여연대가 강화해야 할 방향은? 대중성 56.3%, 전문성 52.7%
- 2011년 주력해야 할 활동, '헌 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종합평가 (43.1%)', '보편적 복지확대와 삶의 질 개선(41.5%)' 순으로 나타나



참여연대가 더욱 강화해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중성 강화'가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성' 52.7%, '진보성' 43.1%, '정치참여' 34.4%, '기타' 0.6% 순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2011년 참여연대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활동에

대해서는 '헌 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종합평가 (43.1%)'와 '보편적 복지확대와 삶의 질 개선 (41.5%)'을 가장 많이 꼽아주셨고, '총선, 대선을

위한 시민정치참여운동(37.0%)', '표현의 자유와 시민 참정권 확대 (24.2%)' 순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PART III. 회원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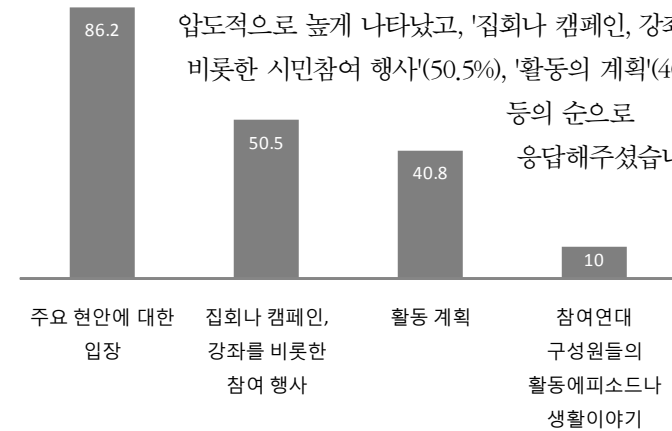
- 참여연대 활동소식을 접하는 경로 '월간 참여사회' 1순위
-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 우선 개선해야 할 소통 수단, 이메일 뉴스레터

참여연대 활동소식은 주로 '월간 참여사회'를 통해 접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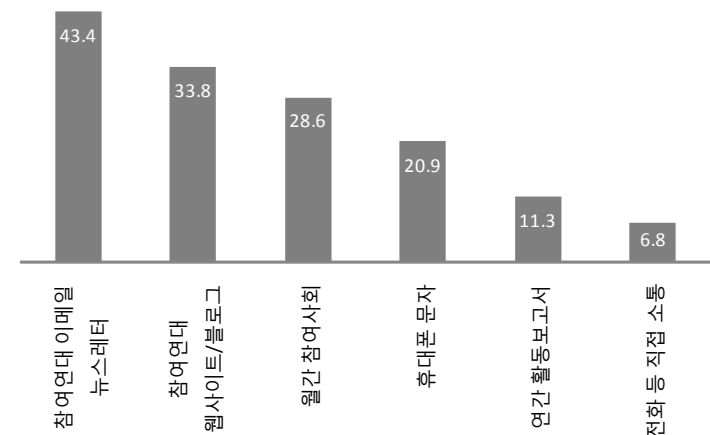
응답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매체 42.8%', '신문방송 보도 30.5%', '참여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29.3%' 순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어떤 소식을 가장 듣고 싶어 할까요?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응답이 86.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집회나 캠페인, 강좌를 비롯한 시민참여 행사'(50.5%), '활동의 계획'(40.8%) 등의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우선 개선해야 할 소통수단으로는 '이메일 뉴스레터(43.4%)'를 1순위로 꼽아주셨고, 개선 방향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웹사이트 개선(쉽고 간단한 내용, 회원소통 공간개선)', '참여연대 SNS 개설 (트위터, 페이스북 등)', '휴대폰 문자 확대', '대중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참여사회 개선', '지역회원모임 등 직접소통 강화', '스마트폰 앱개발' 등 총 130분이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2011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의견을 달라는 주관식 질문에는 총 189명 답을 주셨고, 회원참여 프로그램 확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략 마련, 현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사업 홍보 기능강화, 민생사업 강화, 일반시민과의 소통 강화 등에 힘써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회원모니터단이란?**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구성한 500여명의 회원의견그룹입니다. 모니터단은 회원님들의 거주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추천해 구성하였고, 2년을 임기로 연간 총 4회 이메일 설문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연대 노래

박원순 작사, 지근식 작곡 (1997년)

1.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아름답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다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2.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정의롭고 맑고 깨끗해진 세상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
시민들의 목소리로 참여연대
시민의 권익은 우리가 지키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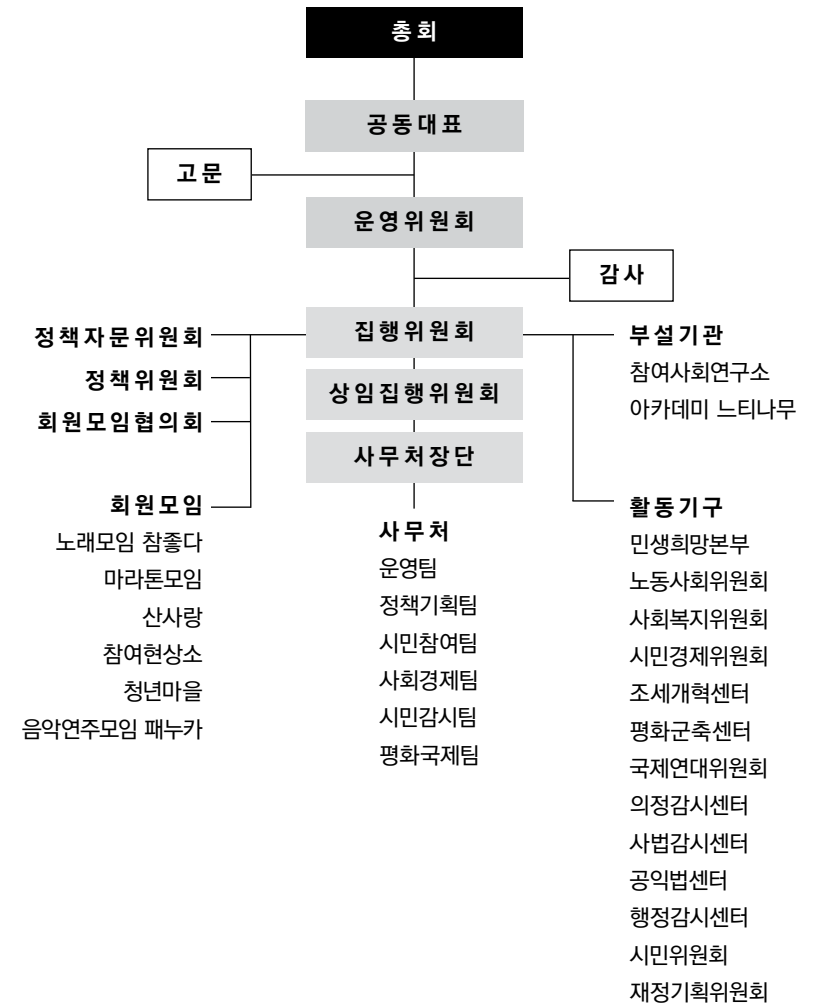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희망 속에 서로 의지하는 세상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
물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되어
흐르고 마침내 큰 강물 이룬다

후렴

참여하자 연대하자 그 꿈 우리 함께 이루기 위해
참여하자 연대하자 아름답고 밝은 세상 이루기 위해

참여연대 기구표

2011. 3. 5. 현재





참여연대 제17차 정기총회 자료집

- 발행일 2011년 3월 5일
- 발행인 임종대·정현백·청화
- 주 소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 전 화 대표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